

## 기•조•연•설•문

# 한반도 평화실현과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하여

부 81주

친애하는 각계의 대표단 여러분! 마침내 우리는 1995년 한복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칠천만 겨레의 통일열망과 의지가 집약된 해방 50주년이자 분단 50주년인 1995년, 올해는 우리 모두가 내외에 친명하고 약속했던 바로 그 통일원년이 되는 해입니다. ‘통일은 됐어!’라고 하셨던 고 문익환 목사님의 말씀이 어느새 이렇게 우리 앞에 현실로 성큼 다가온 것입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민족의 최대 과제인 ‘통일’은 감히 입에 올리기도 힘든 말이었습니다. 통일을 말하는 것 자체가 마치 반역죄라도 짓는 것 같은 민족대결적인 상황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외세가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횡포를 부리고 민족의 이익을 침해해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대항도 못한 채 숨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우리 혈육의 반쪽인 북쪽이 어떠한 사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수십년동안 강요된 사실만을 받아들여야만 했고, 우리 스스로는 혈육이 사는 모습을 확인할 수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분단과 적대의 시대, 반통일적이고 민족대결적인 상황은 남과 북, 해외의 칠천만 겨레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러한 분단의 질곡, 분단의 아픔은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한시도 통일에 대한 열망과 요구를 멈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청년학생들을 비롯하여 종교인과 기업인에 이르기까지 사상과 입장의 차이를 넘어서는 분단극복의 민족통일대장정은 드디어 분단 50년의 큰 장벽을 훤들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8월의 태양 아래에서 최루탄 가스에 숨쉬는 것 조차 어려웠고, 전투경찰의 방패가 통일행진을 가로막았지만 칠천만 겨레의 통일과 민족대단결을 향한 전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젊은이들의 외침은 들불처럼 번져나가 온 국민들의 가슴 속에 통일의 불을 지폈습니다. 종교인, 여성, 노동자, 농민, 지식인 등 성별과 종교와 계층을 초월하여 우리 국민들은 모두 일어나 통일의 큰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들어 낸 통일의 물줄기는 국가보안법을 뛰어 넘어, 휴전선을 뛰어 넘어 우리 칠천만 겨레가 이제 다같이 통일의 노래를 부르며 분단 50년을 통일시대의 원년으로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 ■ 8·15 50년, 조국의 평화실현과 자주통일을 위한 민족대토론회

## 대표단 여러분!

분단 50년을 넘기지 말고 기필코 통일을 이루겠다는 철천만 겨레의 통일결의를 세계만방에 전명한 것은 민족사적 당위의 차원에서 뿐만아니라 분단 50년을 전후한 현재의 시기가 분단질서를 극복하고 통일의 전기를 마련하느냐, 아니면 또 다시 분단과 굴종을 계속하느냐의 갈림길로 되는 엄중한 민족사의 대전환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전환기에 우리 민족이 선택하는 길은 우리 모두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해방 50주년을 온 겨레가 함께 경축하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이루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종전 50년을 맞기도 하는 올해, 세계사의 흐름은 냉전을 종식하고 평화와 호혜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지난 시절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동서대립을 격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던 베트남 전쟁의 당사자인 미국과 베트남조차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지난 반세기동안 진행된 아픔의 역사를 씻고 새로운 21세기를 여는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등 냉전의 역사는 50이라는 숫자를 마지막으로 거의 마감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과 함께 지난 반세기 동안 진행된 가장 큰 전쟁의 하나였던 한국전쟁에서 총부리를 겨눈 미국과 북한도 손을 마주잡고 관계개선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지난 50년동안 체제대결의 최전선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던 북한과 일본 역시 북미관계 개선의 흐름과 북한에 대한 일본의 쌀지원을 계기로 해서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동서냉전구도가 와해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한반도의 신교차승인 구도는 동서냉전구도와 맞물리면서 한반도에 분단이 고착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한반도의 탈냉전과 분단구조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대표단 여러분!

그러나 당면한 세계질서가 평화를 향하여 낙관적으로 흘러간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새로운 세계질서는 군비확장의 추세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있지 못하며, 곳곳에서 새로운 민족분규가 분출하고 또 한편으로 경제적 혜게모니를 위한 강대국간의 각축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대국주의와 패권추구가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전례없이 치열하게 진행됨으로써 탈냉전의 세계질서에 새로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동북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미 대화와 북·일 대화의 이면에는 21세기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쥐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혜게모니를 재정비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 확대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도 아시아 지역의 대주가 되기 위한 실력을 기르고 있으며, 일본 역시 막강한 자본력과 첨단 군사력을 종합한 힘을 바탕으로 패권적 압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동북아의 질서를 자기 뜻대로 재편하여 21세기에도 아시아 지역을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두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대표단 여러분!

이처럼 여전히 엄혹한 세계질서 속에서 우리는 기필코 남과 북의 민족대단결을 이루어 통일된 조국의 힘으로, 단결된 민족의 힘으로 21세기 세계사의 무대에 진출해야 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하게 내세울 것은 철천만 겨레의 단결입니다. 우리 철천만 겨레는 통일이라는 민족의 과제를 달성함으로써 민족의 생존을 보장하고 민족의 번영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온 겨레의 단결을 이루는데서 통일에 나서는 사람이라면 모두 껴안고 나아가 철천만 겨레 모두가 통일의 길에서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겨레의 단결을 온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같은 민족간에 서로 적대시하는 모든 제도와 법률과 관습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같은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분단시대의 유제를 폐지하여 남과 북이 힘을 합쳐 민족사의 전환기에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남북 당국이 상호불신과 적대정책을 해소하고 민족의 이익이라는 큰 틀안에서 화해의 전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철천만 겨레의 대단결을 보장하는데 있어 매우 긴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단결된 힘과 의지는 민족의 대동단결이 시급하고 절실한 지금, 남북 당국의 전향적이고 포괄적인 화해조치를 촉구하고 보장하는데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 대표단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작년 한해동안에도 여러차례의 전쟁위기를 겪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민족은 돌이킬 수 없는 민족공멸의 수렁으로 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는 2차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점령으로 분단이 된 이래, 강대국들의 한반도 개입으로 한시도 평화가 깃들지 못하는 불안한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수천년의 우리 역사를 살펴보아도 우리 주변의 외세는 항상 평화보다는 전쟁과 갈등을 야기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동돌리는 협소한 국수주의를 경계하되 한반도에서 전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외세에 대해서는 단호히 투쟁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구조적인 요인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나감으로써 통일을 위한 평화지형의 정착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그 누구도 한반도의 온전한 평화실현에 장애를 조성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길만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과의 호혜평등한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길이며, 나아가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길일 것입니다.

## 대표단 여러분 !

이제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길은 보다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철천만 겨레가 지금 이 시각 남과 북 그리고 해외에서 함께 전개하고 있는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는 올해 95년이 통일시대를 여는 원년임을 나라 안팎에 엄숙히 선언함과 동시에 이제 우리가 보다 실질적인 분단구조의 극복과 통일을 향한 구체적인 도정에 들어서고 있음을 천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길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하고 90년대 통일의 이정표라 할 '남북 사이의 불가침 및 화해, 협력을 위한 기본합의서'의 실질적 이행에서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와 비슷한 분단국가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남과 북이 공존하고 공영하는 연방제 방

식의 통일방안합의를 거치면서 통일은 민족구성원 모두의 실재적인 삶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빌어 민족의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재통일을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단결된 힘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칠천만 겨레가 하나로 단결한다면 내외의 조건이 어떻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남북의 공존과 공영, 그리고 민족구성원 모두의 통일된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대표단 여러분!

세계는 지금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공존공영하는 민족공동체를 이를 때, 우리는 민족의 이익을 중심으로 세계의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세기를 통일과 함께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힘껏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방 50년을 맞이하여 민족의 단결과 평화를 위한 깃발을 높이 들고 21세기의 통일조국을 향하여 다같이 힘차게 달려나갑시다.

1995. 8. 14.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

## 1.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경/남

### 아가씨가 동무에게 드리는 긴급제안

통일, 너무 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칠천만 겨레가 통일의 길로 나서는 데는 작은 이야기 하나 하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남쪽에서는 ‘동무’라는 말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국민학교 음악제에 ‘동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노랫말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동무생각”, “동무야 나오너라” 등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동무’라는 말은 지금 쓰고 있는 ‘친구’라는 말보다 훨씬 더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60년대 초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 거리거리의 담벼락이 반공포스터로 도배가 되었는데, 그 중에는 ‘간첩 식별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새벽에 바짓가랑이가 물에 젖어 있는 사람(산에서 내려온 사람)’, ‘무의식중에 모르는 사람을 ‘동무’라고 부르는 사람’ 등 열 가지 식별요령이라는 게 있었다. 이 때부터 동무라는 말이 조심스러워 졌다. 또 하나는 ‘아바이 동무!’, ‘어마이 동무!’ 어쩌고 하는 반공영화나 라디오 드라마도 동무라는 말의 숨통을 조이는데 단단히 한 뜻을 했습니다. 실제로 동무라는 말 한마디때문에 국가보안법에 걸려 죽도록 고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남쪽에서 동무라는 말을 꼭 살려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무라는 말이 북쪽에서

는 정치사상적 용어로도 쓰여진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동무’라는 말은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사랑과 정을 둘째 불어넣었던 소중한 말이기에 버리기엔 너무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건 남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결할 뜻입니다.

그런데 북쪽에서는 처녀를 ‘아가씨’라고 부르면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0년대 남북 적십자 회담때 남측 대표가 북의 초대소 접대원을 ‘아가씨’라고 부르다 창피를 당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가씨’라는 말이 옛날 사대부 집안의 아녀자를 부를 때 쓰이던 말이라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쪽에서는 처녀 모두를 일반적으로 ‘아가씨’라고 부릅니다.

저는 북쪽 형제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북쪽에서도 ‘아가씨’라는 말을 ‘처녀’라는 말과 함께 거부감없이 들어주었으면 하고 말입니다. 인민이 주인인 세상이라면 아녀자들이 아가씨 소리를 듣는 것도 괜찮은 일일 것 같은데.....

화해는 서로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분단 50년의 역사가 남북의 언어도 많이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에 동족간에 서로 낯을 붉히거나, 자신이 속해 있는 체제속에서 억압을 받는다면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만)

## 한/국/여/성/단/체/연/합

# 일본위안부 사죄배상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여성계의 입장

남과 북 그리고 해외에 계신 자매와 동포 여러분!

올해는 일제의 예속으로부터 해방된지 50년이 되는 해이고, 또한 해방과 함께 주변 강대국의 개입으로 민족이 갈라진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제 식민지로부터 우리 민족이 해방된 것은 온 겨레가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아직도 해방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하에서 우리 여성들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치욕스런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하면서 머나먼 이국 땅에서 원통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해방 50년을 맞는 이 시점에 일본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오히려 PKO파병, 전쟁찬미 등 군사대국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가 갖은 고초를 겪었고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여성으로서의 삶을 송두리채 빼앗기신 할머니들이 두 눈 부릅뜨고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법적 배상을 외면한 채 기만적인 ‘민간위로금’으로 과거를 청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방 50년을 맞는 오늘, 일제의 식민지 치하에서 인간 이하의 고초를 겪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이 밝혀지고 일본 정부의 사죄와 법적인 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본으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전쟁 범죄에 대한 침략사죄-부전결의를 받아내지 못하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을 길이 없으며, 이는 동북아를 비롯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해방의 기쁨도 누리기 전에 주변 강대국의 개입으로 한민족이 두개로 갈라지고 군사적으로 대치하면서 동서냉전 질서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온 지도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히 여성들은 남북분단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분단을 이유로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이 27

년간 지배하면서 군사문화가 생활 깊숙이 들어와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 문화가 결합되어 여성폭력과 여성차별을 당연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소득 10,000불이라는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이라는 안보논리 때문에 높은 방위비를 부담하면서 ‘자유와 복지’ 등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세계는 변했습니다. 냉전은 낡은 유물이 되었고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냉전체계 속에서 군사안보를 추구했다면 이제는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인간안보’가 중요한 가치로 부상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안보보다 인간안보가 더 중요한 평화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 국가인 남한은 군사력을 경쟁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국방예산은 전체 예산의 22.1%를 차지하는 11조 744억원이고 사회복지비는 6.38%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의 복지비 지출 수준은 세계 70위라고 하니 우리 국민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전지구적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인 장애자, 어린이를 위한 사회복지제도가 제대로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지구적 차원에서 군사비 지출을 삭감하고 인간 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차원은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남북한이 상호 군비를 축소하고, 나아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방위전략도 민족공동방위전략으로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민족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통일조국이 되어야 세계 열강들과 경쟁하면서 민족의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을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일본군위안부의 진상규명과 일본의 사죄배상을 받아내고 기만적인 ‘민간위로금’을 철회시킨다.
-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아내기 위해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가입반대 운동을 벌여 나간다.
- 삶을 질을 높이는 통일시대를 맞이하기 위하여 방위비 삭감 등 평화군축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 43년째 발효중인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

(김숙임)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창조적 통일교육으로 통일논의의 대중화를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 시대에서 1945년 8월 해방될 때, 수천년간 함께 살아오면서 형성한 언어와 협통, 문화와 예술 등의 동질성을 이념이라는 양분법에 따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개의 국가로 분할하여, 오직 대립과 투쟁이라는 적대적 가치관으로 획일화시켰습니다.

그후 수천년간 함께 한 민족의 동질성 화복에 관한 논의는 미군정 치하에서 북한 공산주의자라는 적대적 이념아래 철저히 봉쇄되었습니다. 반민특위의 해체와 함께 되살아난 친일세력은 이승만 단독정부의 실질적 구성체로 정치, 경제, 행정, 군경, 특히 학계에서 지금까지도 애국자로 존경되고 있습니다.

해방 50주년이 되는 현시점에서도 민족통일문제를 국민차원에서 논의한다는 것을 정부는 인정하지 않으며, “민족통일노선을 곧 반미주의이며, 반미주의는 곧 용공주의”라는 논리로 왜곡시킨 것이 그동안 우리 남한의 교육실상이었습니다. 해방이후 미, 소의 민족분단 정책으로 수립된 체제하에서는 민족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추구하는 올바른 통일논의나 과학적 연구를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면서, 외세를 배격하고 자주적 평화적 통일문제를 지향하던 학자들이 수난을 당했기 때문에 민족통일문제를 기피하는 것이 학자들의 상식으로 정착하고 말았습니다.

분단체제하에서 그 왜곡된 이념이나 목표에 영합한 학자들은 동족을 오직 공산당이라는 타도의 대상으로 상정하여 독재체제를 공고히 구축하면서, 민중을 탄압하고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봉쇄하는 부끄러운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족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탄압이 심할 때 오히려 더욱 강렬하게 우리 문화유산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타민족의 지배나 억압으로부터 굳건하게 독립하여 주체성,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능동적 활동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몇 해 전만해도 통일문제 논의는 제도의 억압에 따라 실형을 면할 수 없었으나, 오늘의 현실은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공동선언]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전환기의 순간입니다. 한 민족간의 이익을 위하여 타민족의 간섭에 공동으로 대항하고 동족간에 협력하는 공영의 시대를, 그리고 부분적 교류에서 전면적인 교류와 협조로, 나아가 민족통일을 앞당길 수밖에 없이 국민의 의식은 전환되고, 남·북 기본합의서를 통해 상호신뢰의 기초아래, 북조선이 미국, 일본과 수교를 맺고 정상적 외교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우리 민족통일의 여건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이와같은 변화는 휴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될 것입니다.

우리의 통일은 자주적이고 평화적이어야만 하는데,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상호간의 공격적 무기와 군사력을 감축하며, 또한 주한미군도 단계적으로 감축내지 철수할 때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같은 상황속에서 우리 학계에 주어진 임무는 [민족통일]의 당위성과 역사성을 각 방면에서 일반화, 대중화시키는 작업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교수들은 강단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학생들의 의식을 전환시키는데 노력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학생은 바로 우리 민족통일의 역동적 담지자들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교수들의 창조적 발전적 조국통일교육이 절실한 때입니다.

(양재혁)

호/남

## 작은 차이를 넘어 단결의 큰 길로 나아갑시다

올해는 분단 50년, 우리가 통일운동을 전개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원해왔던 95년 통일은 오지 않았지만 여기서 실망할 때는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통일운동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 때, 그리고 통일운동상에 나타나고 있는 시련과 분열을 딛고 전국민과 더불어 통일운동을 전개할 때 통일은 우리에게 성큼 다가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통일운동은 창구단일화를 외치는 소수 정권담당자의 전유물이 아니며 또한 오래전부터 온몸을 던져 통일을 일구어 왔던 우리들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분단으로 고통받고 있기에 진정으로 통일을 갈망하고 있는 이 땅의 7천만 겨레가 자주통일운동세력이며 통일운동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통일운동의 진행방향과 내용은 철저히 통일운동의 주인인 7천만 겨레의 뜻과 의지를 모아 실현되어야 합니다. 남한 통일운동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만이 진정한 통일세력이다. 우리가 통일운동을 주도해야한다>는 사고는 정부만이 통일운동을 독점해야 한다는 창구단일화 논리와 별반 차이점이 없는 잘못된 것이며, 이것은 우리 스스로 통일운동을 왜소화시키고 통일운동을 전국민적으로 열어나가는데 장애로 됩니다. 통일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지금까지 통일운동을 일구기 위해 헌신했던 집단이나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겸허한 자세를 갖고 대하며, 현재 까지 통일운동에 열정을 갖고 행동한 사람이나 집단은 우리만의 사고를 버리고 더더욱 통일운동을 대중화시키는데 한알의 밀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국민을 믿읍시다.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시기마다 예외없이 역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통일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단의 고통이 깊었기에 출발은 더디었지만, 통일의 참방향을 향해 쉼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통일운동에 나서고

있는 사소한 차이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광범위하게 통일운동에 참여하고 말없이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우리가 통일운동에 혼란을 조성할 때 우리 국민들은 우리를 외면할 것입니다. 혹자는 현재의 이러저러한 차이를 큰 차이로 생각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우리끼리의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닙니다. 전국민적으로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명제앞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저러한 차이는 전국민들 속에 용해될 때 해결됩니다. 통일은 7천만 겨레의 통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한에서의 통일운동은 4500만 이 땅 국민들의 통일운동이어야 합니다. 모든 통일의 원칙과 방도도 국민들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정부만의 어떤 독단적인 결정도 국민들의 합의가 없으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듯이 운동 진영내의 여러 원칙과 방도와 내용도 국민들의 광범한 지지와 참여가 전제될 때, 통일의 참원칙과 방도와 내용이 됩니다. 우리 모두 사상과 정견 정파를 초월해서 국민적 통일운동과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을 나오기 위하여 올해 디딘 첫발을 알차게 가꾸어서 7천만 겨레의 힘찬 발걸음이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 한규채 )

## 진/보/정/당/추/진/위/원/회

**통일은 이 시대 최고의 정치적 쟁점!  
진보세력이 정치적 문제해결을 선도해야합니다.**

해방과 분단 50주년을 맞이하여 남과 북, 그리고 해외의 동포들이 한마음으로 해방을 기념하면서 통일을 이루기 위한 결의의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비록 남과 북의 현실때문에 남과 북, 해외가 공동으로 한 장소에서 기념행사를 하고 결의를 다질 수는 없게 됐지만, 평화와 민주주의, 평등과 번영의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문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 구성원 모두가 당면하고 있는 실천과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통일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할 당면 과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하며, 난관이 많습니다. 남과 북 정부의 이해가 다르고, 또 남북을 둘러싼 미·일·중·러의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당, 사회단체, 그리고 각계각층의 관점과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통일문제는 이 시대 최고의 정치적 쟁점이자, 가장 복잡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통일문제를 당위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복잡한 현실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풀어 나가야 합니다. 통일의 원칙은 당위의 문제라기 보다는 통일을 실현해 가는 과정의 원칙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통일은 평화와 민주주의, 평등과 번영의 길을 확고하게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랜 분단상황이 초래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에 각별한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면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현실문제입니다. 남과 북의 정부가 좀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남과 북의 민이 좀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남과 북의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좀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남과 북이 갖고 있는 현행 제도들은 바로 이와 같은 요구에 따라

개정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북한형법,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제반 법령과 조치들이 그런 방향에서 정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전쟁의 지속과 재발을 방지하고, 남북의 엄청난 물자가 군비에 투자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입니다. 평화협정의 체결과 군비축소, 그리고 군사적 대결과정에서 초래된 환경위기를 해결함으로써 통일국가 건설의 새로운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평화체제의 구축에 따라 막대한 군사비가 통일국가의 경제, 사회복지 그리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재원으로 전환됨으로써,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통일은 기왕에 존재하는 두 개의 정부와 국민을 형식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창조해 나가는 대역사를 의미합니다.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는 바로 그런 새로운 사회창조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전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서 현실을 무시한 단계론을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남과 북이 기왕에 합의한 바 있는 '합의서'를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적한 이러한 전제는 그 과정에서 충분히 마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만큼 '합의서'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합의서의 이행과정에서 이러한 전제들이 함께 마련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합의서의 이행이 확실히 보장되고, 그 내용이 남과 북에 정착되는 조건이라면 언제든지 남과 북의 사회적, 정치적 통합의 단계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방제가 아니라 '국가연합'과 같은 방안이 남과 북을 통합시켜 나갈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남과 북의 현실,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의 성격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북통일의 방안과 형식보다는 통일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전제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통일을 보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평화와 민주주의, 평등과 번영을 모토로 하는 대중적 통일운동이 확대강화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통일을 단지 남북정부당국간의 이해관계조정의 산물로 만들지 않고, 민족적 이익을 실현하고 진보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핵심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대중적 통일운동의 대의와 요구를 대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정치부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남과 북의 기성 정치세력들은 냉전과 분단상황의 수혜자이며, 이들이 중심이 된 정치적 협상에 단지 압력을 행사하는 수준의 대중운동만으로는 커다란 한계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통일이 이 시대 최고의 정치적 쟁점이며, 따라서 다양한 민간차원의 노력이 확대강화된다 하더라도 그 중요한 결정들이 정치적인 형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진보적인 정치세력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진보적인 정치세력은 통일이 평화와 민주주의, 평등과 번영의 길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치적 주체이기 때문이며, 또 광범하게 확산되는 대중적 통일운동을 올바르게 대변할 수 있는 확실한 담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진보정당추진위원회는 바로 이 때문에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각별하게 강조하고 있으며,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한 많은 진보적 통일인사들과 단체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노회찬)

##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 평화와 통일현실의 과제

### 1.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해방 50주년을 맞아 남과 북, 해외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측에서는 해방 50주년을 전민족이 함께 경축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반 논의를 진행하고, 서로간의 교류를 통한 화해와 단결의 기운을 높이기 위해서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북과 해외에서도 유사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중의 하나는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특히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남과 북은 각각 120억달러와 30억달러 이상의 군사비를 투자하며 180만명이상의 군병력간의 대치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시 중단하고 있는 휴전협정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휴전협정의 조건 아래에서는 교전대상자의 일방적인 무력행사나 선전포고에 의한 적대행위의 재개가 합법적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한반도는 화약고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특히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 이행기구가 사실상 해소되어 버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정전위원회의 당사자인 북한과 중국은 94년 4월 28일과 9월 1일을 기해 철수함으로써 그 기능이 정지되었고, 스웨덴과 스위스,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로 구성된 중립국 감시위원회도 91년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면서 이탈하고, 95년 3월 폴란드마저 철수됨으로써 활동정지상태에 빠져있습니다. 따라서 휴전협정을 대신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평화협정이 조속히 체결되어야 합니다. 현재 평화협정의 체결과 관련하여 남한 정부는 남북이 체결하고 미국과 중국이 추인하는 2+2 정책을, 북한은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에 미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미국은 1950년 한국전쟁 참전과 휴전의 당사자이며, 아직도 남한 전역에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군사적 긴장의 당사자이기 때

문입니다. 또한 미국의 동아시아와 태평양 전략 수행에 미군을 축으로 한국군을 편입시키고 있고 한국군의 미군에 대한 높은 정보의존도 등을 고려해 볼 때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에서 제외된다면, 북한의 참여를 이루기도 어렵고 진정한 평화체제 구축에도 장애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참여가 전제되는 바탕위에서 당사자 문제는 탄력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지난 91년 채택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이행된다면 평화의 정착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 2. 일본의 과거청산과 부전결의

다음으로 아시아 평화를 위한 과제의 하나는 일본의 과거청산과 부전결의의 실현을 들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를 비롯한 PKO 해외파병, 125톤(20년간)의 플루토늄 비축계획과 아오모리현(로카소촌)의 핵기지화 등의 핵정책, 자위대의 현대화와 GNP 1%를 넘어버린 군사비 지출 등의 군사정책 등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이 정치 군사대국화, 군국주의 부활의 길로 들어섰다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우리 민족은 특히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커다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식민지 지배에 맞서 민족 주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학살과 투옥, 20여만명의 군위안부와 100만명이 넘는 강제징병, 강제징용, 원폭희생자, 강제이주, 23명이 처형당하고 148명이 억울한 옥살이한 전범자 처리문제등 그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아직도 미해결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분단의 원인제공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의 움직임에 예민할 수 밖에 없으며, 일본이 아시아 평화에 최소한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면, 전쟁과 식민지 지배로 인해 아시아 각국에 안겨준 고통에 대해 피해배상을 포함한 과거청산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소한 국회차원의 부전결의를 통해 평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일부 움직임은 이와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29일 개최된 ‘아시아 공생의 제전’에서는 국회의 부전결의를 반대하며, 침략전쟁을 자위전쟁으로 미화하고 ‘전몰자 추도’라는 이름아래 그 책임을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쿠노 세이스케 전문부상(태평양 전쟁은 일본의 자위전쟁)과 와타나베 미치오 前외상(한일 합방은 평화적으로 체결)의 망언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연립여당의 ‘침략사죄, 부전결의’ 문제는 연립여당의 정책적 약속이었을 뿐 아니라, 종전 5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이 과거 침략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새로운 국가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잣대입니다. ‘역사를 교훈으로 평화에의 결의를 새롭게 하는 결의안’은 불행히도 이러한 아시아 각국의 기대를 저버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결의안이 그대로 채택된다면 아시아 각국의 새로운 관계정립이라는 것은 요원한 일로 될 것이며, 오히려 새로운 긴장관계를 야기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탈냉전은 아시아에서도 새로운 관계정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관계는 평화를 위한 자주와 친선의 관계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식민지 피해배상, 침략사죄, 부전결의’는 이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며, 이러한 전제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일본의 정치, 군사대국화 추진 움직임은 아시아 각국의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유기홍)

## 제/주

# 통일은 참된 인간성의 회복이다

안녕하십니까?

반도의 최남단 제주에서 인사 드립니다.

분단과 해방의 반세기를 맞이하면서 어느 지역, 어느 부문의 사람들이 분단에 대한 깊은 아픔과 민족의 재통일을 위한 결의로 충전하지 않겠습니까? 제주민 역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러한 심정은 절절합니다.

해방후 민족의 혼란과정에서 제주사회는 빠아픈 역사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소위 ‘4·3’이라고 불리는 제주 사회의 경험은 이후 제주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인식을 고정화시키는데 이용되었으며, 이는 민주, 민권의식의 성장을 가로막는데도 중요한 몫을 해왔습니다.

해방후 수년간 이루어진 제주민중의 항쟁은 한마디로 ‘자주독립 통일국가’ 수립을 염원한 것이었습니다. 민족의 진로에 대한 외세의 개입을 막아내고 이데올로기의 차이에 의한 민족의 분단을 반대하면서, 민중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통일국가 건설은 당시 최대의 과제였으며, 제주민중은 이의 실현을 위한 선도적인 투쟁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투쟁에 침략적 외세의 엄청난 물리력을 무차별적인 학살로 맞섰으며, 이로 인해 제주민의 인적, 물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의 냉전체제 고착과 한반도에 대한 분할정책은 제주민의 염원을 반인륜적인 대규모 집단학살과 제주섬의 초토화 방침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해방공간의 이러한 사건 후 분단을 유지하려는 세력은 대규모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감행했으며, 연좌제라는 이름으로 인해 갖가지 불이익을 제주민은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제주민중항쟁의 역사는 단절의 경험을 가졌고, 8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민주화운동에 대한 약간의 진전이 있었으며, 민족민주운동진영은 투쟁의 과정에서 제주에서 ‘4·3’의 문제에 접근하지 않으면서 제주민의 민주, 민권의식의 성장과 통일운동의 확산은 요원하다고 판단, 대중적으로 ‘4·3’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4.3'의 문제는 곧 민족의 재통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4.3'과 통일운동을 결합시켜 왔으며, 이의 성과로 제주민 사이에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피해의식이 극복되고 있으며, 이는 통일의식의 확산과 민주의식의 성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민족의 하나됨과 함께 우리 민중 개개인의 삶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반쪽의 사상에 묻혀있게 되고 수십년전의 기억에 생활의 구애를 받으며 현재에도 갈등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제주사회의 경험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며 합의와 평화에 기반한 하나됨을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온전함을 되찾는 것으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작은 공동체가 겪은 좌·우갈등과 반목과 질시의 경험은 그로 인한 인간성의 파괴를 초래했듯이, 우리 민족은 지금 민족성이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4.3의 갈등을 푸는 것이 제주사회 작은공동체의 회복과 제주민족의 역사적 전통을 세우는 것이라면 민족의 재통일은 민족구성원 개개인이 온전한 인간으로 성숙하는 과정이며 수천년 이어온 민족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상과 이념이 인간에 대한 존엄과 민족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까지나 하나의 민족을 우수하게 세우는 것과 반쪽의 인간이 아닌 온전한 인간으로의 성숙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의 차이로 인해 가족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면, 사상과 이념의 차이로 인해 민족이 반세기 동안이나 갈라져 있다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통일운동은 곧 완전한 인간과 민족성의 회복을 위한 투쟁입니다. 이 투쟁은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넘는 전민족적이고 전민중적인 것입니다.

(한 석)

## 겨/레/모/임/동/맹

# 조국의 자주통일과 외세, 외세주종세력

문민정부라고 자처하는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족은 이데올로기에 우선한다고 하였다. 어떠한 논리와 강변도 결코 민족의 이익과 생존권을 침해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민족의 분단이다. 분단은 바로 우리 민족의 행복과 권리를 무참하게 짖밟고 있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족의 분단을 해결하지 않는 민족운동은 거짓이다. 그래서 통일운동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역사가 던져준 민족적인 과제인 셈이다.

분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첫째는 이데올로기의 통일을 해서는 안된다. 남쪽이나 북쪽의 일방적인 흡수통일은 민족내부의 갈등과 모순을 심화시킬 뿐이다. 이것은 지역갈등보다 더욱 심한 민족내부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위험천만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둘째는 자주성의 원칙을 버려서는 안된다. 외세에 우리의 통일문제를 맡기는 사대적인 외교는 민족의 자주성을 버리는 일이다. 분단의 해결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역량에 의해 성취해야 한다. 그것만이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는 길이며,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다.

셋째는 남북한 모두가 사회의 민주화를 성취하면서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한 체제의 주인은 민중이지 결코 소수 지배자의 몫은 아니다. 민중들이 진정한 사회의 주인으로 행세하는 과정에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민족내부의 갈등과 증오는 사라질 것이다.

넷째는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우리 민족은 6.25전쟁이라는 민족적인 비참한 과거를 안고 있으며 그때의 상처는 지금도 아물지 않고 있다. 또다시 무력이라는 수단이 동원된다면 민족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분단 상태로 그냥 있는것이 차라리 나을른지 모른다.

다섯째로 정치적 통일을 하기 전에 문화적, 경제적인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민족내부의 구성원이 통일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일은 정치적인 선전이나 결단에 의해 이루어지는게 아니다. 남북한, 해외 7천만이 자주 만나고 교류하면서 서로의 체제나 생활을 이해하고, 경제적인 수준이 어느정도 균등하게 이루어졌을 때 점차로 정치적인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민의 통일운동을 막는 일을 당장에 중지해야 한다. 통일운동은 이상과 같은 원칙을 결코 버려서는 안된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바탕에서 우리는 통일로 가는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가 있다.

첫번째로 이땅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고, 휴전선에 전진 배치된 무장군대를 후방으로 일정거리 이동시킨 후 유엔이나 중립국의 감시아래 단계별로 군비를 감축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민족간의 무력충돌을 막을 수 있다.

다음으로 군비가 축소되고 남북한에 신뢰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외세의 상징인 미군이 한반도에서 물러나야 한다. 미군의 주둔은 사실상 한국의 정치적 자주성을 감시하고 침해하는 수단이다. 이 땅에 외세의 군대가 물러날때 진정한 민족의 자주성은 실현되는 것이다.

세번째는 다원화된 외세에 적극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미국은 1905년부터 한국의 식민지배에 간여하였고, 1945년부터는 분단을 고착화 시켰다. 그리고 이 땅의 독재세력을 양성하고 용인하면서 자국의 세계전략에 이용하였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정치에 간여하였던 소련이 해체되고, 일본이 경제,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걸으면서 외세는 다원화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일방적인 독주를 벗어나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통일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우리는 다원화된 외세가 결코 우리 민족내부의 통일문제에 직접적인 간여나 간섭을 하지 못하게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며, 분단을 고착화시켜 자국의 이익을 유지시키는 어떠한 논리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네번째로 남북간의 문화적인 교류를 깊게 하는 일은 통일을 성취하는 첫번째 걸음이다. 따라서 민의 통일운동이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대중의 문화욕구에 맞추어 들어가야 한다. 정치행사 보다는 문화행사 중심으로 대중을 통일운동의 선상에 끌어들여 통일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는게 중요하다.

지금 우리 민족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경제전쟁, 정보전쟁, 과학전쟁이라고 불리우는 세계사적 전환기는 언제까지 민족간에 불신과 반목을 거듭해야 하는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분단을 끝장내지 못하면 우리는 역사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또한 민족의 모순과 갈등으로 2등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외세의 군사적 지배에 이은 경제적, 문화적 지배를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지금 민의 통일운동은 분단의 사슬을 걷어내고 민족의 자주성, 주체성을 지켜나가는 역사적 행위이다. 여기에서 좌절하여 멀다면 우리는 역사 앞에 산자가 아니라 죽은자로 기억될 것이다.

(오정운)

## 총/청

# 자주적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

존경하는 전국 통일꾼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단 50년 통일원년에 전국 각 지역의 각계각층이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새날을 열고 현대 민족사의 분단의 매듭을 끊어내고자, 여기에 뜨거운 통일열망으로 모였습니다. 해방 50년이라고는 하나, 우리는 실상 분단 50년의 칠흑같은 어둠과 단장의 아픔을 참고 이겨내어 민족통일 공동체를 성취하고자 지금까지 불굴의 투쟁을 해왔습니다. 경향 각지에서 모인 우리는 분단의 쇠고리를 끊고 조국의 평화통일의 거룩한 생명의 씨앗을 뿌려, 드디어 분단 50년 기독교적 희년 50년에 민족의 자유와 정의, 해방을 선포하는 뜻깊은 열매를 거두는 역사적 변혁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 8·15 민족공동행사 대전충남 준비위는 이 통일대토론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통일의지를 천명합니다.

첫째로, 한반도의 분단은 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제국주의 세력들의 힘의 재편성과 국가이기주의의 악마적 욕망에 그 원인이 있었음을 우선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제국주의 세력이 기득권 세력과 기회주의적 위장 민족자본의 물적토대에 의지한 세력들을 직·간접적으로 원격조종하는 속에서, 우리 민족은 사상이념의 반공이데올로기에 편승하여 민족분열을 결파하는 길들임에 침묵해 왔음을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한반도의 민족은 민족의 총체적 파괴와 반평화적 갈등과 대립을 지속했습니다. 급기야 우리는 6·25라는 민족전쟁으로 제국주의의 대리전을 감수해야만 하는 억장 무너지는 슬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 문화적 종속에 빠아픈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더구나 혈연, 언어, 습관, 역사전통의 민족공동체는 반목과 대립의 적개심으로 서로를 물어뜯는 일에 고무되어야 했습니다. 아! 이런 수치와 모멸, 아픔의 통증을 어찌 방관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는 해방절 50년을 기념하는 축제보다는 분단 50년을 극복

하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민족대단결의 하나됨의 화합의 잔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이상과 같은 분단 고착의 쇠사슬을 끊어내고자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제국주의 세력인 외세의 침탈을 근본적으로 이 땅에서 척결하여 자주적 민족공동체를 꾸려 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민중의 목을 조르는 국가보안법을 완전 철폐시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평화적 조국통일을 성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력이나 일방적 흡수통일은 민족분열은 가속화하거나 한반도를 구제불능의 위기에 직면케 합니다. 그리고 헌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끈질긴 투쟁이 요청됩니다. 그러므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반드시 전환시키기 위한 투쟁이 요청됩니다. 그 끝으로 우리 민족은 민족통일을 통해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화해와 사랑으로 화합하고, 섬김과 나눔의 친교로 민족의 하나됨을 지구촌 인류에게 선포하여, 평화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민족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우선 민족대단결의 모범으로, 분단의 회생양이 되어 옥살이하는 장기수를 즉각 석방하여 본래적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특히 대전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비전향 장기수 합세한 선생님을 고향인 황해도 옹진으로 반드시 보내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화해와 평화를 바라는 전 국민의 바램이며 화해와 평화로 가는 역사적 흐름에 맞게 제일 먼저 실행해야 하는 역사적 흐름입니다.

넷째로,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우리는 각 지역과 계층 속에서 평화통일운동을 민중운동으로 보편화시켜야 합니다. 대전충남지역은 그동안 중단없는 가열찬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지역 통일운동에 복무해왔습니다. 조국평화통일운동의 중심적 거점지역으로 교량역할은 물론, 열악한 조건하에 수많은 동지들은 헌신적으로 역사현장에 참여해 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통일운동이 민중적 대중성을 확보한 지역운동으로서 역사를 참여해 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통일운동이 민중적 대중성을 확보한 지역운동으로 역사를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도 민족통일을 우리시대의 역사적 소명으로 인식하고, 적극 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평화통일운동이 들불처럼 번져가도록 가열차게 투쟁할 것을 다짐합니다. 특히 남북 그리고 한 통일시대를 만들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전충남 지역민들의 힘에 의거하여 이러한 우리의 신념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통일꾼 동지여러분!!**  
백두에서 한라까지 남누리 북누리 온누리에 민족희년의 통일을 성취함에 우리 모두 하나되어 역사의 추진 세력으로 힘찬 전진을 합시다. 어느 누구도 평화의 새물결로 다가오는 환태평양시대의 평화구현을 막을 자는 우리의 통일운동에는 통일운동의 재단에 생명을 바친 동지들의 살아 움직이는 통일 혼이 없을 것입니다. 민족통일의 신새벽을 활짝 열어 젖혀 손에 손잡고 통일 축제의 한마당을 펼쳐나갈 것을 함께 할 것입니다. 결의하며, 대전충남 지역민들의 의지를 한데 모아 통일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김 용 우)

## 부/산

# 통일운동의 성격과 민족대단결 정신을 바로 이해하자

오늘 8.15 50주년을 맞이하여 통일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부산지역을 대표해서 잠시 말씀드립니다. 돌아보면 1948년 5월 10일 UN감시하의 남한 단일정부수립을 위한 선거 시행을 전후해서 단정반대의 싸움이 치열했습니다만, 끝내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반대하는 것을 자기 생리로 하여 출범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에 있어서의 통일운동은 원천적으로 정부의 반통일적 생리에 도전하는 반정부적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남쪽에서는 통일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고 감옥에 간 사람의 수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어서의 통일운동은 남북간에 합의한 7.4공동성명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은 한, 북쪽 인민들의 통일열기와 정부간에는 마찰이 없고 일체성을 가지며 오히려 인민들의 통일열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사업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에서는 통일운동을 하다가 사형을 당했다거나 감옥에 갔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과 북의 통일운동의 성격이 다른 점입니다.

통일운동의 성격이 이렇게 다르면 그 운동의 전개방법과 대중 접근방식이 각각 달라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남북해외에 걸친 우리 겨레의 통일운동을 단일강령과 단일규약으로 통일운동을 전개하려는 것은 무모한 짓이며 결과적으로는 통일운동 말살이라는 민족적 불행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8.15 50주년에 즈음한 통일운동 선상에서 또 한가지 뜨겁게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이 북과의 연대 문제입니다. 반통일, 이것을 생리로 하고 있는 정부 하에서 특히 북쪽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북

쪽과의 조직적 연대를 강화해 가는 것이 마치 민족대단결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민족대단결의 정신을 잘못 이해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족대단결의 정신(원칙)이란 민족통일의 기본방향을 7천만 우리 겨레의 민족적 및 인간적 화복(和福)의 희득과 증진을 위해서 민족 승리, 인간 승리의 방향으로 조국을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 북 어느 누구도 패망 없는 승리, 통일을 말하는 것이요, 남, 북 우리 민족 모두가 이기는 것이요, 남, 북 어느 한쪽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 모두가 잘되는 것이요, 남북 어느 한쪽을 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며 통일은 자체로 자체를 지게 하지 않는 민족대아동승(民族大我同勝)의 통일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통일혁명은 남, 북 어느 한쪽도 자체를 지게 하지 않는 민족대아동승(民族大我同勝)의 통일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통일혁명은 남, 북 어느 한쪽을 강화해 가는 것이 마치 민족대단결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잘못 민족대단결 정신(원칙)을 이렇게 이해할 때, 이 정신을 북과의 조직적 연대 강화로 전개하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쪽의 사정은 북과의 조직적 연합이 급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강령적 연대가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필요한 것은 정부가 갖는 반통일생리를 청산하는 투쟁입니다. 조직적 연대는 정부가 7·4 공동성명에 기초한 통일지향적으로 그 생리가 바뀌었을 때, 그 때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다지)

## 2. 조국통일운동의 현황과 과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오늘을 민족통일의 첫걸음으로 여기며

### 7천만 겨레동포여!!

해방 50주년을 맞아 저희 학생들은 민족의 미래를 개척하는데서 오늘을 뜻깊은 날로 새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분단 50년이 되는 올 해는 7천만 겨레가 <통일원년>으로 만들자고 약속하였으며 하나같이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시발점이 되도록 하려고 열심히 투쟁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겨레의 통일의지가 하나로 모인 날이며 7천만 겨레가 통일을 선언하는 날입니다.

저희 학생들은 오늘을 민족통일의 첫걸음으로 여기며 민족통일의 그날까지 열심히 투쟁할 것입니다. 지난 50년간 우리 민족은 이제 더 이상 분단된 상태로 살아갈 이유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갈라진 것이 아니며 강대국의 자기 이권논리에 의해 갈라졌음을 알았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너무도 절절히 재통합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족통일은 민족적인 문제로 이념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민족사랑의 정신을 앞세워야 함을, 그래서 우리는 비록 체제가 다르다 하더라도 공존공영하면서 하

## ■ 8·15 50년, 조국의 평화실현과 자주통일을 위한 민족대토론회

나의 국가로 통일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7천만 겨레가 분단 50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공존공영하면서 민족의 재통합을 위해 떨쳐나선 이상, 이제 민족통일은 멀지 않았으며 역사의 <통일시간표>는 시작되었습니다.

**7천만 겨레동포여!!**  
저희 학생들은 언제나 민족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고 민족통일을 위해 선봉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최근만 보아도 88년의 남북청년학생회담 성사투쟁, 89년의 평양축전 참가투쟁과 임수경 대표의 방북투쟁, 90년의 범민족대회 성사투쟁, 91년의 범청학련 건설투쟁, 이후 범민족대회 사수투쟁 등은 뜨거운 가슴과 넘치는 패기로 7천만 겨레에게 민족의 통일을 이야기한 이백만 학생의 자부심입니다. 남북해외 이백만 청년학생은 이를 자랑으로 여기고 있으며, 더욱 단결된 힘으로 민족통일의 그날을 향해 힘차게 진군합니다.

우리 이백만 학생은 민족통일에서 올해가 가지는 중대한 의미를 공유하고 이를 투쟁으로 실현시켜 왔습니다. 특히나 한반도가 다시금 세계열강들의 각축장이 되면서 민족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놓인 상황을 학생들로 의 선봉적인 투쟁으로 통일에 유리한 조건으로 전변시키려 하였습니다. 이백만 남북해외 학생은 한반도에 통일의 불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청년학생 통일선언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백만 학생들이 통일의 나팔수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6·3 청년학생대회>로 모아 <민족공동 경축행사>를 성사시킬 것을 결의하였습니 니다. <6·3 청년학생대회> 이후에도 민족공동 경축행사가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참가 속에 통일의 분수령이 될 수 있도록 <7천만겨레 통일선언운동>과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천투쟁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7천만 겨레동포여!!**  
해방 50주년을 경축하는 민족공동행사는 분단역사를 마감하고 민족의 재통합을 염원하는 7천만 겨레의 단결된 의지였으며, 급변하는 세계사에 민족의 번영된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단에 빌붙어 살아온 분열주의 세력을 단죄하고 그들의 죄악상을 날낱이 밝히는 치열한 힘의 대결이었습니다. 특히나 <통일대토론회>에서 모아진 각계각층의 의지는 이후 통일을 향한 7천만 겨레의 약속이며 통일의 길을 밝히는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통일대토론회에서 모아진 민족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같이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남북해외 이백만 학생은 이번 8·15 경축 민족공동행사를 계기로 시작된 7천만 겨레의 통일대행진의 선봉에 설 것이며, 90년대에 반드시 민족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를 계기로 모아진 각계각층 통일역량과 힘있게 연대하고 단결할 것입니다. 특히나 하반기에 있을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통일운동을 주인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입니다. 학생들은 이 투쟁에 모든 조직을 총발동할 것이며, 각계각층과 연대하여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철폐합니다. 그리고 <단군릉 답시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여 민족의 화합과 자주적인 교류를 실현하고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긍지를 높일 것입니다.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된 날로부터 시작된 통일투쟁의 역사는 이제 실제로 통일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각계각층이 결집하여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흐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90년대 통일실현이라는 민족의 새역사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강원

## 모든 것은 통일로부터

여기 한 환자가 있다. 열이 나고 소화불량에 온 몸이 나른하다. 해열제, 소화제, 영양제를 먹는다. 그런데 이제 잠도 안 오고 통증까지 심하다. 그래서 수면제와 진통제까지 복용한다. 정밀검사 결과는 암이다. 암환자에게 강장제 치료제는 쓸 데 없다. 암 자체의 치료가 열쇠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시방 암이다. 도대체 온전한 부위를 찾아보기 힘들다. 머리, 몸통, 손발에 병이 깊어 지도총부터 피지배증, 어른부터 아이까지 위태롭기 짝이 없다. 삼풍사건 수습과정에서 본 의혹 시비와 이런 변고를 겪고도 백화점 세일에 몰리는 인파를 보라. 이 와중에 광주학살 불기소라니 참으로 허망한 세상이다.

이 모든 병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나는 그 원인이 분단이라는 암이라고 진단한다. 타의에 의한 격리, 과거의 악의 연속이라는 체질 위에 비민주적 정권과 천박한 형태의 자본주의라는 오물이 들어와 피는 더럽혀졌다. 그 결과가 전신의 암인 것이다.

자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병의 치료는 타인(의사)이 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가 자연의 힘을 이용해 하는 것이다.

우선 스스로 해야 한다. 스스로 하겠다고 의지를 확고히 하여야 한다. 외세가 도울 수는 있지만 스스로의 노력 없이 통일은 불가능하고, 해도 불완전한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자연(도리)에 합당한 통합이 되어야 한다. 서로가 서로의 과거와 현재, 인격, 체제를 존중하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자연스런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정부와 국민 모두의 책임이다. 서로 손뼉을 두드려야 소리가 난다. 통일을 저해하는 여러 요소들을 불식하고 적극적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 50이 지 천명(知天命)이라, 천명 곧 하늘의 뜻은 통일이다. 하나된 몸은 곧 새로운 생명의 탄생, 건강한 조국의 새출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김 한 성)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교조의 통일교육 활동에 대하여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1989년 5월 창립 당시, 전교조 강령에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천명하고 민족교육, 통일교육을 주요 활동과제로 삼아, 학교 현장에서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여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지난 50년간 냉전 체제아래에서 민족간의 적대감을 요구하는 정부의 그릇된 교육정책 아래 고통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반공 이데올로기로 점철되고 민족적 이질감을 확대시키는 그릇된 냉전 교육으로, 날로 경직되어 가는 아이들의 통일관을 눈으로 보며 가슴이 아픈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사들은 폭압적인 반공교육의 풍토 속에서도 많은 노력으로 민족적 이질감을 극복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통일의 길에서 교육의 역할은 실로 막대합니다. 우리 교사들은 현재 국민 대중의 경직된 통일관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단은 왜곡된 교육을 통하여 유지강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조국의 새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것은 학교 현장교육에서 출발하여야 한다고 우리교사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교사들은 통일을 향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지난 4월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는 학교현장에서 일제 잔재의 청산, 민족정기 수립,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통일교육의 강화 방침을 재확인하고, 통일조국 건설을 위한 남북 교사들의 올바른 역할 수행을 위해 남북 교육자 회담을 제의했고, 통일교육 특별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으로 교사, 학생들에게 통일의 씨앗을 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전교조는 통일주간을 선포하고 1만여 조합원이 30여만 교사대중과 함께 공동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학급토론, 통일행사, 토론을 통해 교사, 학생들과 함께 해 온 그간의 통일교육의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현재는 교사통일학교의 진행이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사통일학교에는 20대 젊은 교사에

서부터 50-60대 노교사까지, 광범한 연령별 참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일조국의 일꾼을 길러내는 씨앗이 아래에서 서서히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 통일교육의 장정에 전 역량을 투여하지 못한 반성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술한 교육 문제나 전교조의 합법화 문제와 분리되어 통일교육의 활동이 진행되었고, 이는 현단계의 통일조국 건설의 장정에서 점차 조정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교사는 박학다식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적 관점을 가진 지도적 역할을 할 때 우리는 존경하는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사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분단의 세월을 거치며, 올바른 교사의 길위에 흔적을 남긴 우리의 선배들이 그러한 전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교육운동을 항상 나라를 세우는 일로써 인식해 왔습니다. 통일조국의 건설에 있어 우리교사들은 천만 학생과 함께 갈라진 세월을 하나로 잇는데 올바른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정 해숙)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문화예술을 통한 부드러운 접촉

문화와 예술은 항상 세속의 삶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긴 세월을 두고 보면 문화도 그 시대 상황의 영향을 깊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이 분단 50년을 지내다 보니 얼핏 하나의 예술작품을 보더라도 그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러한 이질감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어떠한 형태의 통일이던지간에 이러한 낯설음이 남북동포들 누구에게도 느껴지지 않을 때 통일은 진정 완성되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질감 극복의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해야 할까요?

낯설음을 없애기 위한 첫째 방법은 많이 접촉해서 서로 익숙해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우리 남쪽의 사람들은 북한의 문학이든 노래든 영화든 더 많이 보고 부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쪽의 작품들도 북쪽에 널리 알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겪어온 문화의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감통을 줄 수 있는 작품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문화의 전파와 수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형태의 간섭현상이 복잡하게 일어나겠지요. 여기에서 어느 한쪽의 문화가 다른 쪽보다 우월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깊은 심층의 문화가 어떠한 모습으로 모아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분단 이전의 전통민족문화에서부터 출발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노들강변> <신고산타령> <아리랑>을 부르고 풍물춤을 추고 국악합주를 벌이면 신명나는 한판이 되겠지요. 하지만 여기에도 사소한 차이는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전통의 현재화를 위해 악기를 서양음악까지 연주할 수 있을 정도로 개량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남쪽은 전통의 보존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일반 국민들 사이에 대중성을 잃어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다 보면 사사건건 걸리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질감은 점점 더 크게 느껴지고 설사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화적 낯설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레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심증을 일거에 떨쳐버릴 수 있는 길은 역시 직접 만나보는 일입니다. 문화적 이질감은 다른 외국 문화를 접하는 일에 비하면 아무런 차이도 아닙니다. 서로의 생각이 글로서 통하고 만나면 언어소통에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문화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주 만나기만 하면 문화의 이질감은 쉽게 극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극도의 적대관계에 왕래조차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자연스런 만남을 이루기까지에는 문화예술적 표현형태를 통한 부드러운 접촉이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한 시대의 예술작품 속에서는 그 시대의 내면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곁으로는 잘 드러내기 어려운 속사정도 문화예술적 표현속에는 잘 배어나기에 언제나 문화예술교류가 먼저 거론됩니다. 그리고 이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 인 배)

## 경/기

# 통일시대와 통일운동의 대중화

분단은 우리민족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일제에 해방되자마자 외세에 의해 다시 국토가 두동 강나고 민족이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이 민족자주적인 힘에 의해 되지 못하고, 외세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해방조국의 건설에 있어서도 외세의 영향이 매우 커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민족은 총단결하여 외세를 배격하고 자주정권을 수립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우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게 되었고, 외세의 의도대로 두동강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힘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상잔의 전쟁을 치르면서 남북이 엄청난 반목과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권자들의 정권유지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장한 것입니다. 이제 화해하고 민족이 단결하여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현재 분단으로 인해 남과 북 모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해도 매년 수십 조원에 달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분단 50년을 맞이한 현 상황에서 더이상 지체할 시간도 없고, 수십년전에 누가 잘하고 못한 것을 따질 여유도 이유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모든 민족이 단결하여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남과 북이 민간 차원에서 주동적으로 화해하고 통일운동을 광범위하게 일으켜서 정권을 움직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일운동을 광범한 대중들에게 확산시켜야 합니다. 대중들의 일상생활에서 민족의 통일이 최대의 관심사가 되게 해야 합니다. 통일의 문제가 일부 선진적인 인사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통일을 위해 벽돌 한 장씩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통일의 문제가 어떤 관념적이거나 당위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민 개개인의 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분단체제하에서 우리가 얼마나 큼 피해를 보고 있고 전쟁의 가능성 속에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지와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가지고 대중속으로 들어가서 대중을 설득하고 대중들이 앞장서서 통일을 위해 노력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경기남부지역은 이제 통일운동이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경기남부지역의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은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의 성사와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많은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우리 경기남부지역의 안양, 안산, 수원, 평택 등 각 지역에서는 광범위한 대중들과 함께 통일운동을 하기 위해 여러가지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각 지역에서 칠천만 겨레선언운동의 서명작업과 겨례 한마당을 하였습니다. 경기남부지역의 600여명의 안양, 안산, 수원, 평택, 용인 지역의 시민들과 학생들이 통일기행을 다녀오면서 통일결의를 다졌습니다. 새로운 것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는 것이고, 젖먹이 아기부터 80의 할아버지들까지 골고루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경기남부지역 통일선봉대가 안양, 안산, 수원, 오산, 평택 등 도시지역을 돌면서 통일의 열기를 확산시켰으며, 자전거 파발마는 경기남부지역 용인, 이천, 여주, 안성, 평택, 화성 등 6개 군지역을 구석구석 돌며, 8·15 민족공동행사를 알리고 통일의 열기를 확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8·15 민족공동행사에 많은 지역 애국시민들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8·15 민족공동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도 중요하지만, 이후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남부지역의 통일운동은 이후 상설적인 통일운동체를 건설하고 통일운동이 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일기행을 각 지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통일 강연이나 문화행사 등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대중들 속으로 파고 들어 갈 것입니다.

95년은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시대를 열어갈 첫해로 되어야 합니다. 이제 통일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모든 힘을 모아 통일시대를 활짝 열어 갈 수 있도록 해 나갑시다. 경기남부 지역의 모든 통일 일꾼들과 시민들은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여러 동지들에게 굳게 약속드립니다.

(박우석)

## 민/족/의/화/해/와/통/일/을/위/한/종/교/인/협/의/회

### 종교인들의 통일운동에 대하여

종교인들의 통일운동은 아주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무엇을 말씀드려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종교인들과 통일운동의 친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모든 종교는 적대와 분열 대신에 화해와 용서를 가르칩니다. 모든 차이를 넘어서려는 종교인으로서는 이념상의 대립, 특히 동족간의 체제 경쟁을 용인하기 어렵습니다. 종교인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려는 사람이라면 갈라진 동족의 혈맥을 잇는 통일운동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종교인들도 분단 이념의 노예가 되어 이기심과 반목, 동족상잔의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의 통일운동은 이념을 앞세워 동족을 미워하고, 민족분단을 정당화하기도 했던 지난 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종교인 통일운동의 주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는 학교 다음으로 체계적인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살려 통일의식을 널리 전파하고 평화를 교육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 교육은 보통사람들의 일상사에서 남북 상호대결, 적대감, 우월감을 부추기는 말과 글을 추방하여 북의 동포들과 형제자매의 정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알찬 내용의 평화통일교재(예컨대 ‘분단의 실상과 교회의 통일운동’, ‘민족의 禧年을 향한 행진’ 등)를 만들어 활용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통일운동은 또 분단 희생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국내외 이산가족의 아픔, 장기수들의 고통, 국가보안법 희생자들의 고난을 같이 짊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수 후원모임들이 활동 중이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습니다.

이제 종교인 통일운동의 자기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인 통일운동이 일부 선각자들의 “선언” 차원을 벗어나 제도권으로 확산되면서, 그 역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잘 팔리는 상품이 되었다는

자조(自嘲)가 들리는가 하면, 통일운동과 전시성 행사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통일을 위한 교류와 대화는 실종되고, 교세 확장을 위한 방북 경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통일운동이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운동이 대중화되면서 과거의 물리적 충돌대신에 합법적 절차가 자리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법적 방식의 운동에 따르는 댓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법에 정한 소정의 절차를 밟아 대화와 교류를 추진하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원래의 계획을 포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대회를 합법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종교儀式 외에는 어떤 것도 못하게 됩니다. 통일에 관한 남북 종교인들의 공동선언 정도를 채택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면, 당국자는 그것은 정치성을 띠므로 안된다 고 합니다. 당국자 눈에 비정치적인 것은 통일운동 측에서 보기에도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남북의 종교인들이 만나려면 순수하게 종교적 목적으로 만날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는데 순수하게 종교적이라는 게 무엇인지 종교인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통일운동의 원칙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운동은 남북의 동포들에게 남녀의 우월성을 과시하거나 무엇을 베푸는 일이 아닙니다. 통일운동은 우리 겨레가 반세기 동안 겪은 분단의 체험을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활용하여 세계인류가 공유할 이상을 창출하는 과정입니다.

(명진스님)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총의 깃발을 힘차게 부여안고 노동자 통일운동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뜻과는 상관없이 외세에 의해 이루어진 분단 50년의 역사는 남북해외를 포함하여 민족성원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만을 남겼지만 남한의 노동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로부터 자유스럽지 않았습니다.

재벌을 비롯한 자본가들의 탐욕이 활개를 쳤던 가운데 이에 맞서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대중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고자 했던 민주적인 노동운동은, 빨간 땡지를 앞세운 역대 정권의 법률적, 물리적 탄압으로 분단의 쓰라린 맛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 금지,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동3권 금지, 노동자들의 정치활동 금지, 제3차가입금지와 복수노조 금지, 이로 인한 수많은 구속수배해고 노동자의 존재 등이 중첩되어 있는 이 땅의 노동현실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서, 오늘날 우리 민족에게만 남아 있는 분단체제의 산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50년간 GNP의 2-30%를 소모적인 국방비에 퍼부었던 비극적인 분단현실로 인해 노동자들은 자신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적으로 10위 안팎에 있으면서도, 그에 걸맞는 사회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임금만 가지고 허덕허덕 살아왔습니다.

해방직후 활발했던 노동운동과의 단절을 딛고 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그 대중적 토대를 마련했던 남한의 민주노조운동은 정권과 자본의 혹독한 탄압에 맞서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끊임없이 성장하여 오는 11월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생산직과 사무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자를 망라하여 약 50만의 노동자를 포괄하는 <민주노총>을 건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겹히 되돌아보건대 노조활동의 폭은 협소하였으며 분단이 노동자들에게 주어왔던 깊은 상처와 고통에 비해 분단과 통일에 대한 노동자들의 관심과 참여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노동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노동자 통일운동은 조금씩 성장, 발전하여 왔지만 노동자들의 명실상부한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의 관심과 참여는 저조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방 50주년, 분단 50주년을 맞이하여 민주노조운동의 전국중앙조직인 민주노총 준비위는 통일운동에 공식 나섰습니다. 사업은 물론 방침조차 없었던 그동안의 부진을 씻어내고 통일특위를 정식 구성하고 '해방 50주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노동조합의 이름하에 각종 사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미관계의 개선 등 정세변화속에서 통일이 더이상 당위가 아닌, 대중적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으며, 노조운동이 7-8년간의 경험을 축적하면서 분단이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운동의 발전에 미치는 여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대중적인 인식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통일운동은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합니다. 단적으로 말해 노동조합 통일운동을 위한 상층 차원의 틀거리를 만들고 매우 기본적인 사업에 착수하기는 하였으나, 노동자들의 힘의 기반인 단위사업장 차원의 대중적인 통일운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 대중의 계급적 처지와 실정에 맞는 통일운동 내용과 방식을 마련하지 못해, 전체 민간통일운동의 발전에 주체적으로 복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고 노동자가 통일운동의 선봉에 서서 50년간의 분단을 끝장내기 위하여 이 땅의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의 깃발을 힘차게 부여안고 실천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통일운동을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허 장)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통일운동에 나서는 보건의료인의 반성과 제안

이제 통일은 단지 염원이 아니다. 현실이다.

이제 통일은 그냥 현실이 아니다. 통일은 우리의 중추신경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작동시키느냐와 무관하면서도 유관하게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자율신경과도 같이, 우리의 신체활동을 지속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자각하든 않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조건을 자연스럽게 감지하고 우리의 생명활동을 현실조건에 맞게 적응시키고 있다. 중환자에게서 그러한 변화가 발생하듯 부단한 생명의 근거인 기를 일으키고 생존의 근저로부터 발전하여 활기찬 생활로 나아가는 생명현상과도 같이, 통일은 50년이란 세월을 분단상태로 살아온 현실조건에 맞춰 우리 민족공동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생활로 발전시켜온 자율적 생명유지의 기운으로 살아있는 현실이다. 한마디로 통일은 생명현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치유력(원상회복력)과도 같이, 갈라져 있는 우리 민족공동체를 지키고 하나로 이으려는 생명력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이제 통일은 불투명한 미래형 현실이 아니라 투명한 현재진행형 현실이다.

이제 통일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냉철한 질문에만 답하는 기정사실형 현실이다. 통일은 그 동안 우리에게 요구해온 뜨거운 가슴만이 아니라 한결음 더 나아가 차가운 머리까지 요구하는 단계로 올라 서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통일을 이룰 것인가와 함께 어떤 통일을 이룰 것인가를 더욱 더 깊이있게 생각해야 하는 단계로 우리의 노력을 쑥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대목에서 총체적인 쟁론과 거기서 비롯되면서 거기로 귀착되는 여러 각론들을 심화시킬 필요를 느끼게 된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생활현실의 제약으로 실천활동에서 다소 소극적이기도 했고, 실제로는 적극적인데도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다. 사실상 우리 보건의료인들이 자기 고민으로서 일상성, 전문성, 대중성이란 화두를 놓고 고민하면서 나름의 노력을 해온 것에 관해서는 자기반성과 동시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인은 6월 항쟁 이후 공개적 대중조직운동으로서 사회운동의 대열에 나서면서 고유의 보건의료제도 문제는 물론이고, 민중보건 발전과 통일보건 실현이라는 지향을 공유하면서 의료보험 개정운동, 산재직업병추방운동, 농촌 및 도시지역의 지역보건활동, 반핵 평화 환경운동 등을 전개해 왔다. 그런 가운데 5차례의 범민족대회에 직접 간접으로 참가하면서 통일운동의 한 부분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

지금 여기서 나는 보건의료인 자신과 전체 통일운동 진영에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보건의료인 자신의 반성이다. 이제 우리 보건의료인은 지금까지 해온 통일관련 활동을 중간점검하고, 보건의료인의 과제를 새롭게 세워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인이 해야 할 통일관련 연구, 논의, 실천의 항목들을 공동으로 설정하고, 공동진행할 사안과 분담 진행할 사안을 추려서 새로운 흐름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유력한 방안으로는 본인이 여러 차례 주장해 온 바도 있지만 [보건 의료인 통일운동 공동조직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를 보건의료단체 대표자회의에 공식적으로 공개제안하며 규모나 임무가 크든 작든 단체 내부 결정들을 거쳐서 힘있는 조직체로 출범시켜주길 부탁드린다.

둘째는, 전체 통일운동 진영에 드리는 제안이다. 보건 의료단체들은 범민족대회 초기 단체에는 4개 단체가 단체이름을 걸고 참가하였다. 그러다가 일부 단체는 단체 내부사정도 있었겠지만 남북해외 3자연대 통일운동체 논의가 범민련 결성으로 결정되면서 발걸음이 둔화되었다. 마침내 5차 범민족대회에는 1개 단체만 참가하게 되었다. 이런 모습은 바로 대중적 현실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초기 논의 당시 '건·약' 회장이었던 본인은 3자 연대는 기본원칙이므로 적극 추진하되, 형식은 연합체보다는 낮은 수준의 협의체 정도가 현재의 실정에 적절하다는 점을 밝혔었다. 현실적인 제약이 가장 많은 것이 남쪽이고, 그 중에서도 국민정서상 앞머리에 서기가 쉽지 않은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오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가는데 뒤늦은 보건의료인도 발걸음을 재촉할 것이니 함께 가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생각하자는 부탁도 덧붙였다.) 이제 참으로 간곡한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린다. 우리가 진정 통일을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 통일운동의 대단결이 중요한 만큼, 보건 의료인과 같이 부진한 통일희망 대중들까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족적 통일운동 조직의 거시적 형성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다. 이 부탁은 몇몇 활동가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자기 반성이 필요하고, 허심탄회한 반성을 한다면 겸허하게 자기 자리로 가야 할 사람들에게 하는 제안이 아니다. 통일은 창구 단일화 운운하는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듯 통일은 통일운동가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7천만 겨레가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7천만 겨레의 통일열망, 그 의견을 담아낼 큰 그릇이다.

(임종철)

## 전/국/농/민/회/총/연/맹

### 통일농업의 실현을 위해

친애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한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모든 분들께 600만 농사형제들의 뜻을 모아 인사드립니다.

100년 전 척양척왜 · 보국안민의 기치를 내걸고, 이 땅의 근현대사에 자주와 민족대단결, 민중주체를 선포 하였던 갑오농민선조들의 뜻을 받아, 우리 농민들은 저 UR 개방압력의 큰 파고를 넘어 수입개방저지 투쟁의 승리인 WTO이행특별법을 쟁취하였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신농정을 주장하며 농민을 무시하고, 미래 통일 농업의 기초마저 혼들던 김영삼정권의 사대매국적인 음모를 날낱이 들튔내었습니다. 개혁과 세계화를 내걸고 있는 김영삼정권은 민족산업인 농업을 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쌀만은 대통령직을 걸고라도 막겠다던 약속은 어디 가고 개방만이 살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다음의 네 가지를 주장하여 왔습니다.

바로 식량자급형농업, 환경보전형농업, 소득보장형농업이 그것이며 마지막으로 통일대비형농업입니다. 식량이 자급되지 않으면 민족자주권이 상실됩니다. 민족자주권이 상실되면 통일이 되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보전되지 않으면 건강한 먹거리가 없어집니다. 약탈농법과 극독성 약제로 버무려진 농법은 통일시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주지 못합니다. 또한 소득이 보장되는 농사는 근로대중인 농민의 삶과 질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어우러져 바른 농업으로 될 때 통일농업은 실현되는 것이며 통일한국의 기틀이 더욱 다져지는 것입니다.

최근 김영삼정부에 칭찬해 줄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북한에 보내는 쌀입니다. 그것도 일반미로 말입니다. 저는 지금 박수를 칩니다.

지금 통일이 되어도 쌀이 800만석이나 모자랍니다. 북한에 인사치례로 조금 보내면서 쌀이 모자라네, 비축 미가 떨어졌네, 일반미가 없네 합니다.

간단합니다!

농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하면 됩니다. 쌀을 전량수매하고 증산운동을 벌이면 됩니다.

통일을 열망하는 애국 시민여러분!

남과 북은 전면교류되어야 합니다.

남쪽의 경운기, 관리기와 북쪽의 뜨락또르가 교류되어야 합니다.

남쪽의 벼종자가 올라가고 북쪽의 감자 씨가 내려와야 합니다.

농민회원이 북쪽의 협동농장을 방문하고 농업근로자동맹원이 남쪽의 미곡종합처리장을 방문해야 합니다.

농업학술 · 기술간 교류, 인적교류가 광범위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냉전적 대결의식을 버리고 통일조국의 농업건설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온나라 모든 국민이 원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합니다!

교류하려고 하니 이 법이 문제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이 법이 문제입니다. 자주교류의 장애가 되므로, 통일의 장애가 되므로 없애자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통일운동에 앞장서려 합니다.

앞으로 통일운동은 지역단위에서 자체 실천사업을 많이 해야 합니다.

지역 농민들이, 일반 농민회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실천활동은 통일운동을 한 차원 높여 농고 대중화 시켜낼 것입니다.

내년에는 삼천리 대행진을 더욱 광범위하게 펼쳐서 마을마다 안 가는 곳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회를 준비하고, 열고, 지킨 우리 모두와 일꾼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민족통일만세! 통일농업만세! 조국통일만세!

(홍번)

서/울

## 통일운동 전개에서 대중적 관점

북과 해외에서 오신 동포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의 마음은 지금 동포 여러분을 만나게 된 벽찬 기쁨과 함께 분단 반세기가 되도록 우리의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안타까움과 자책감, 그리고 반통일세력에 대한 분노 등으로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심정입니다.

우리 민족은 조국 분단의 시점에서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난 반세기동안 한시도 쉬임없이 통일운동을 벌여 왔으며, 남녘 땅의 우리 선열들과 형제들은 당국의 탄압 속에 말할 수 없는 희생과 고통을 겪으면서 북녘 동포들과의 화해와 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남측의 통일운동세력이 북과 해외의 동포들에게 8·15 민족공동행사를 제안하게 된 것은 이러한 성과를 계승하여, 민중이 주인이 되어 나서는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족공동행사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저희 서울지역의 통일운동세력도 조국통일의 대업을 이루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는 일념으로 나름껏 정성을 들여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5월부터 일부 지구에서는 ‘남측 준비위’ 사업계획으로 잡혀 있는 겨레한마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고, 7월에 들어서는 이를 6, 7개 지구로 확산시켰습니다. 이와 결합하여 통일선언 운동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대중적 통일운동도 지구별로 진행했습니다. 5월 23일 강서, 양천 지구에서 있었던 통일염원 거북이 마라톤 대회를 시발로 구로, 금천 지구의 통일염원 자전거 대회, 남부지구(관악, 동작, 영등포구)의 통일 한마당 등이 각각의 지구에서 진행되었으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서대문 마포, 북부(도봉, 노원, 성북, 강북구), 강동 송파 지구에서도 이러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재작년부터 시작된 이들 행사들은 올해에 와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회단체 회원들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함께 스스럼없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대중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이러한 지구 차원의 사업과 함께 전체 서울지역 차원에서도 비록 규모가 적고 어설했지만, 서울지역 통일 운동사상 처음으로 지난 7월 17일 시민들과 함께 하는 통일염원 서울시민 가요잔치를 잠실 시민공원에서 치렀으며, 8월 8일에는 “통일희망나누기 서울시민 큰 잔치”라는 대중행사를 보라매 공원에서 열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준비위원회 소속 노동조합들의 통일축구대회와 시합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저희는 노동 형제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통일운동에 나서게 된 것을 서울지역 통일운동의 발전에 큰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지역 통일운동에서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사항은 그간 남측 통일운동의 선봉대로서 그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일해 온 청년학생들이, 이제는 선도적인 활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대중적인 통일 운동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독자적인 학생들만의 통일행사를 해왔던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과 각 지구 총학생회 연합은 올해에는 각 지구와 서울차원의 대중적 통일행사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준비하고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점진적 통일운동역량과 광범한 민중의 일치단결을 선언하는 것을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로 한 8·15 민족공동행사의 취지에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우리는 통일운동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대중적 관점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천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우리가 올바르게 사업하기만 하면 통일운동이 짧은 시간 내에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올해 서울지역 통일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이 점, 통일운동이 자연스럽게 대중적 관점과 원칙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히고, 그 실천에 대한 경험을 쌓게 되었으며, 대중들과 자연스럽게 시작했다는 점에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북녘 땅과 이역 만리에서 조국통일의 염원을 안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포들께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성우)

# 남북해외의 칠천만 동포에게 드리는 글

남북해외의 칠천만 동포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반세기가 되는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에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를 거족적으로 전개하게 된 것은 통일원년을 맞는 남북해외 칠천만 동포들의 열렬한 통일염원을 세계만방에 과시하고 민족의 대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남북해외의 칠천만 동포 여러분!

일제 식민지 기간동안 우리 민족은 제 말, 제 이름조차 쓰지 못하고, 혹은 전쟁의 대포알 밭으로 혹은 치욕스런 정신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 저주스런 식민지 역사를 위대한 선열들의 빛나는 항일투쟁으로 종지부를 찍은 지 반세기가 되는 날인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방과 함께 밀어닥친 외세의 개입으로 인하여 지난 반세기는 민족이 갈라져 서로 적대하면서 살아온 분단의 세월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민족이 갈라져 적대하면서 사는 고통과 설움은 일제 식민지 하의 비참한 현실에 버금가는 것입니다.

그리기에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민족은 진정한 자주와 통일을 위하여 고난에 찬 역정을 걸어왔습니다. 진정한 자주와 통일 없이는 민족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남북해외 할 것 없이 민족성원이라면 누구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남북해외의 칠천만 동포 여러분!

세기 말에 들어서 미소 냉전 체제가 해체되면서 세계는 지금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이렇듯 급변하는 세계사의 흐름은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민족의 자주권을 더욱 굳게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급류속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강화하고 민족의 이익과 미래를 보장하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길은 오직 통일임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따라서 분단 반세기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민족사적 당위입니다.

정서의 차원을 넘어 민족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현실적 요구입니다.

남북해외의 칠천만 동포 여러분!

금세기 안에 통일을 이루어 21세기를 살아갈 우리의 후손들에게 통일조국의 온전한 삶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여전히 평화통일을 반대하고 흡수통일이나 무력통일을 꿈꾸는 세력들을 견제하고 제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들은 아직도 만만치 않은 힘으로 버티고 있지만 민족의 단결과 통일을 바라는 칠천만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 앞에 점점 힘을 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분단과 외세의 압박이라는 고난의 삶을 견디고 이겨내면서도 민족통일의 새 역사를 이루어낼 소중한 업적들을 가꾸어왔습니다. 그 소중한 업적들은 적지 않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바로 7.4남북공동성명입니다.

남북 당국이 합의하고 온 겨레가 지지 성원한 7.4남북공동성명에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 통일의 기본이 되는 원칙이 천명되어 있습니다. 자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 길이 바로 통일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원칙에 입각한다면 풀지 못할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해방 5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을 기해 다시 한번内外에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이 민족통일의 변할 수 없는 기본원칙이며, 통일 앞에 가로놓인 장벽을 헤쳐나갈 민족의 지침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남북해외의 칠천만 동포 여러분!

지난 50년간 우리는 참혹한 전쟁과 그로 인해 더욱 침예해진 군사적 대치 아래 정상적인 삶의 기회조차 유보당한 채 강대국의 냉전 정책에 예속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적대와 증오의 삶을 단호히 걸어치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한반도에 드리워진 소모적 군사 대치의 집약적 근거인 정전협정을 즉각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아울러 미국은 6.25 전쟁의 교전 당사자이자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이며, 또 현재까지 남쪽에 주한미군이라는 군사력을 유지시키고 있으므로 평화협정 체결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을 밝혀둡니다.

남북해외의 칠천만 동포 여러분!

또한 최근에 이르러서는 일본의 노골적인 정치군사대국화를 저지하는 문제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분단은 일제 식민통치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패전후 50년이 지난 오늘도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오히려 전쟁찬미, 평화헌법 개정, PKO파병 등 신군국주의로의 지향을 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과 사죄, 배상없이 '민간위로금' 따위로 아시아 민중을 기만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일본 중의원에서 채택된 '침략사죄·부전결의'가 빠진 <종전 50주년 결의>는 남과북은 물론이고 아시아 각국들로부터 거센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의 아시아 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정치군사 대국화 움직임에 일치단결하여 공동대응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내외에 염숙히 천명합니다.

#### 남북해외의 칠천만 동포 여러분!

8.15 해방 50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남북 간의 실질적인 화해와 통일을 지향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즉각적으로 단행되고 착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가 분단된 채 살아온 기나긴 반세기 동안 이 땅에는 분단을 유지, 강화하는 법과 제도가 들어서고, 이들 법과 제도는 남북 간의 정치적 반목을 부추기고 심지어 민족의 화해와 단결을 범죄시하도록 만들었습 니다. 이제 남북이 통일로 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마당에서 남의 국가보안법을 비롯하여 한반 도 내에 존재하는 반통일적 법과 제도는 즉각 폐지되거나 통일지향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울러 장기수 등 분단의 회생자들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억류되어 있는 이들의 석방, 송환 조치와 이산 가족의 재회를 포함하는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제반 조치가 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 남북해외의 칠천만 동포 여러분 !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분단 50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독립과 통일을 위해 수많은 시련을 헤쳐온 민족의 저력을 모아 보다 구체적인 통일방안 합의로 성큼 나아가야 합니다. 통일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 거족적인 지혜와 의견을 한데 모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 50여년간 동족간의 대결과 반목속에서도 통일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 안 우리 민족은 분단을 고착시키고 동족 간에 끊임없는 긴장을 부추겨 온 외세의 부당한 간섭에도 불구하고 자주와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대원칙과 나아가 90년대 통일의 이정표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 가침,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와 같은 훌륭한 결실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민족단 결의 훌륭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걸음 크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통일은 결코 하나를 하나를 제압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됩니다. 우리의 통일은 냉전과 분단을 지배해온 힘의 논리에서 과감히 벗어나 평화와 공존의 철학을 민족의 가치로 승화 시키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시대착오적인 적화통일이나 승공통일이 아니라 서로의 제도와 이념, 가치를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차이를 인정하며 크게 하나가 되는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된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통일조국이 이후 어떤 체제로 나아갈 것인가는 민족적 합의를 바탕으로 자주적으 로 선택하고 결정할 문제입니다.

#### 남북해외의 칠천만 동포 여러분!

평화와 공존에 기초한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구성원 모두의 몫입니다. 통일은 어느 일방의 주도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정치인이나 당국자들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올바른 통일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국간 논의와 민간차원의 논의를 포함한 거족적인 논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통일방안을 합의하는 일은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호간에 적대와 반목을 해소하고 '민족

공동의 이익'을 앞세워 접근한다면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당국 역시 기득권을 앞세우거나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를 앞세우기보다는 공존과 상호 인정, 민족의 이익라는 거족적인 이해에 기초해 통일방안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 남북해외의 칠천만 동포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민족의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평화와 공존을 기본으로 하고 민족의 이익을 우선으로 접근한다면 우리는 민족사에서 뿐만 아니라 인류사에서도 새로운 지평을 여는 전기를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남북해외의 칠천만 동포 여러분!

통일조국의 푸르른 하늘 아래 굳게 손맞잡을 그날까지 온겨레가 하나같이 일어나 힘차게 나아갑시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만세!

1995년 8월 15일

8.15 50주년 민족 공동 행사 남측 준비 위원회  
조국해방 50돐 민족통일대축전 북측준비위원회  
8.15 조국해방 50주년 민족공동통일대축전 해외준비위원회

## 참 가 단 명단

1. 상 임 고 문 박용길 오익제 이돈명 조용술 홍창의
2. 상 임 공 동 대 표 김상근 김중배 권영길 박순경 이창복 함세웅
3. 공 동 대 표 배다지 서한태 서경전 염무웅 윤영규 오재식 이수갑 이자현  
이효재 장을병 지 선 천영세 홍근수
4. 공동집행위원장 김용태 이해학
5. 준 비 위 원

(개신교) 29 명

김복기	김상근	김정웅	나핵집	노영우	박기백	박성자	박영모	백남운	유원규
윤길수	이 진	이근복	이명남	이재수	이해동	이해학	임광빈	장성룡	정명기
정지강	정진우	정한식	정해동	조용술	최자웅	허병섭	허성환	허원배	

(천주교) 20 명

고낙철	김동주	김승훈	김형태	김홍진	나승구	남국현	문국주	문규현	민경자
박기호	박은종	박창일	안충석	오용호	윤순녀	이영우	장경암	전종훈	함세웅

(불교) 22 명

금 강	도 각	명 진	무 여	법 광	법 안	월 명	원 혜	유 곡	일 문
장 곡	장 적	종 립	종 호	지 만	지 선	지 흥	진 우	청 화	현 법

홍승효림

강대훈	김 현	김경일	김관진	김정심	박달식	서경전	신명국	이경옥	정성길
정천경	정치원	최정풍							

(천도교) 10 명

김윤관	김재철	김태수	박영엽	박웅하	이상윤	이자현	이현상	최태홍	홍준기
-----	-----	-----	-----	-----	-----	-----	-----	-----	-----

(노동) 34명

권영길	권용복	김국진	김상진	김영대	전영일	김예준	박문진	김형근	류대현
문성현	박용선	박재근	양경규	배석범	백순환	봉찬영	석치순	양규현	윤재건
이규재	염경석	이송준	이승필	이시형	이재남	이재윤	이태영	이형모	전명혁

정광화 최동식 허 장 허영구

(농 민) 5 명

엄영애	이수금	정현찬	조성우	홍 번
-----	-----	-----	-----	-----

(문화예술) 24 명

강연균	강요배	강준일	구중서	김영수	김용태	김정현	류시춘	문병란	문호근
신경림	여 운	염무웅	원동석	이가람	이영섭	이현주	임명구	임옥상	장선우
정지창	정희성	조건영	채희완						

(여 성) 27 명

강유순	김남경	김윤옥	김애영	김희선	박순경	박용길	배옥병	안옥청	오미덕
유춘자	윤문자	윤영애	이경숙	이경숙	이미경	이영순	이은영	이효재	인재근
장하진	전병희	정숙자	정은정	최경화	최상립	최현숙			

(보건의료) 9 명

김광수	박길용	배기영	서한태	양길승	원남숙	전동균	조수월	홍창의
-----	-----	-----	-----	-----	-----	-----	-----	-----

(학 계) 12 명

강명구	강정구	김상곤	김인걸	박거용	박병섭	박재우	박정원	양재혁	이세영
이필렬	최갑수								

(법 조) 13 명

고영구	박성민	박성호	박원순	박찬운	유선영	유선호	윤기원	이덕우	임종인
이석태	조성래	천정배							

(인 권) 5 명

김재훈	박정기	이소선	진광수	한준수
-----	-----	-----	-----	-----

(전교조) 6 명

김현준	유상덕	이동진	이부영	이수일	정해숙
-----	-----	-----	-----	-----	-----

(청 년) 10 명

문부식	박창식	우상호	유기홍	이경률	이기동	이승환	이인영	한충목	허인회
-----	-----	-----	-----	-----	-----	-----	-----	-----	-----

(학 생) 12 명

정태홍	김명옥	김민옥	김봉준	김수현	김태원	배정기	엄성복	이원구	이정호
이필승	이몽석								

(시민운동) 8 명

강태욱	오 현	이대윤	이백용	이병석	이종인	이찬의	최병철
-----	-----	-----	-----	-----	-----	-----	-----

(민족운동) 13 명

김영기	김영호	김원식	김호근	성필환	안재세	양순임	원궁재	육철희	이상수
이수갑	최윤식	표대성							

(평화운동) 10 명

권병길	기세춘	김순정	김승국	김창수	배노연	유종순	임종철	조임숙	홍근수
-----	-----	-----	-----	-----	-----	-----	-----	-----	-----

(사회운동) 37 명
강희석 계명신 김금수 김기수 김석주 김순환 김영곤 김영수 김진홍 김철수
김호연 김희선 나창순 노회찬 도광호 도천수 민경사 박기학 박장근 박창균
박충렬 손창호 안명균 양재원 오용식 유재운 윤영규 윤영상 이계환 이목희
이승우 이창복 이천재 이해학 전용정 정광필 조성범 조성우 조승수 조진태
주대환 천영세 최규엽 최운영 한경남 황선진 황인성
(지 역) 17 명
구희연 김영만 김용우 김진석 노영우 박우석 배다지 서상권 서재일 심성구
양재덕 이수호 정광훈 최교진 한석 한규채 함종호

#### 6. 지역 참가 단

##### 서울 12명

김영도, 석진, 김동진, 김경호, 김석현, 김영애, 김택성, 황영문, 이봉우,  
이원영 김선균 외 1人)

##### 인천 5명

오용호, 홍현웅, 김성진, 양재덕, 조용명

##### 경기 11명

부천 - 성양권, 백선기  
성남- 김창년 외 1인  
경기남부 박우석, 노세극, 신동섭, 도영호, 채한석  
경기북부- 김규식  
용인평택- 1명

##### 부산 5명

배다지, 김영수, 이성우, 손미희, 천지연

##### 호남 10명

광주전남 - 김병균, 진관, 김양무, 강기정, 오병윤  
전북 - 류종완, 고흥석, 한규채, 엄영애, 오두희

##### 대구경북 5명

경남 6명  
서경 - 천영문, 김현  
울산 - 김진석, 진영무  
마창 - 이규철, 오창욱

##### 강원 5명

원주 - 김한성, 김정권, 김진희  
춘천 - 오상운, 이승렬

#### 총청 9명

대전충남(6) 김용우, 최교진, 김선건, 이종대, 윤종세, 김제선  
충북(3) 노영우 정진동 정용기

##### 제주 한석

#### 7. 해외

로광옥 단장, 북미주조국통일동포회의 공동대표, 민족공동행사 미주준비위원회 공동대표  
미주통일운동원로, 민족음악가, 작곡가, 치과의사, 현 74세  
이행우 북미주조국통일동포회의 공동대표, 민족공동행사 해외준비위원회 공동대표  
미주동포전국협회 부회장, 현 67세  
신원호 북미주조국통일동포회의 공동대표, 민족공동행사 카나다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카나다조국통일운동연합 의장, 현 65세  
김경자 카나다조국통일운동연합 회원, 현 60세  
정인정 북미주조국통일동포회의 운영위원, 민족공동행사 미주준비위원회 운영위원  
보스톤한마당정의평화통일위원회 회장, 미연합감리교목사, 현 48세  
최관호 북미주조국동포회의 운영위원, 민족공동행사 해외준비위원회 실무회원  
통일조국과 동포사회를 위한 시카고모임 회장, 내과의사, 현 43세  
정기열 북미조국통일동포회의 실행위원, 민족공동행사 해외준비위원회 공동사무국장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연대위원회 사무국장, 미연합감리교 목사, 현 43세  
이용수 북미주조국통일동포회의 실행위원, 민족공동행사 카나다준비위원회 사무국장  
카나다조국통일운동연합 총무, 현 37세

## 7.21 남북해외 공동합의문 해설

### <전문>

남과 북, 해외 준비위원회는 통일을 열망하는 7천만 겨레의 염원을 모아 8.15 50주년이 되는 올해 8.15를 계기로 민족공동행사를 개최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에는 특별히 해설할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7.21합의는 남북해외 민간 통일운동 간의 역사적인 합의이다. 따라서 합의의 내용을 둘러싸고 이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나 또는 상대의 진의를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자의적 해석이나 진의의 왜곡은 남북해외 간의 상호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 민족단결의 강화에 재뿌리는 일로 될 것이며, 또한 어렵게 이룬 역사적 합의를 스스로 허지조각으로 만들어 민족 앞에 셋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기는 일로 될 것이다.

1. 남과 북, 해외 준비위원회는 민족공동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민족 준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이 항은 민족공동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남, 북, 해외가 공동으로 '민족준비위'를 구성하기로 한데 대한 합의를 담고 있다.

이 항에서 말하는 '민족준비위'는 지난 시기의 범민련과 같이 공동사무국을 두는 상설기구로 제안된 것이 아니라 민족공동행사의 준비를 위한 한시적인 기구로서 제안된 것이다. 남북해외 준비위는 민족준비위를 위한 별도의 남북해외 공동사무국을 구성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단 남북해외의 준비위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상징적인 의미에서 민족준비위 상충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남북해외 간의 보다 정밀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 항은 남북해외 각각의 준비위는 자기 지역의 행사 준비에 필요한 기본 임무를 수행하면서 공동행사의 준비에 필요한 역할을 함께 겸한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항이라 할 수 있다.

2. 민족공동행사는 1995년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다. 남, 북, 해외가 함께하는 공동행사는 8월 15일에 한다.

남북해외의 공동행사 설정기간은 각각 약간의 차이가 있다(예를 들면 남은 12일에서 15일, 북은 14일에서 17일 등). 따라서 이 항은 시간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모두 민족공

동행사의 일환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3자 공동행사를 8월 15일에 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판문점에서 진행할 제반 행사를 8월 15일에 한다는 의미이지, 남북해외가 진행할 각 지역행사에 북과 남, 혹은 해외의 대표가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를테면 8월 14일 저녁 시간에 남측 준비위에서 전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통일가요제에 북과 해외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3. 민족공동행사의 3자 공동행사는 판문점에서 하며 그 밖의 행사를 남, 북, 해외가 각기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기측 지역에서 진행한다.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며 허리잘린 민족의 비원이 서린 곳이다. 해방 50년을 기념하는 민족공동행사를, 그중에서도 남북해외가 함께하는 3자공동행사를 이 곳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남측의 경우 당국이 지금까지 판문점에서의 공동행사를 극히 부분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금지하여 왔으며, 이미 판문점행사 불허방침을 이미 내외에 공표한 바 있다(소위 5.16조치). 그러나 남측 준비위는 이러한 당국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남측 준비위는 역사적인 민족공동행사의 성사를 위해 판문점 장소 사용을 놓고 정부와 끈질긴 협상과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물리적으로 판문점 사용이 불가능해질 경우 그에 대비하는 차선의 조치들을 준비할 것이다.

4. 민족공동행사의 명칭은 행사의 계기와 거족적 성격, 통일지향의 뜻을 담아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한다. 이는 행사의 명칭을 남, 북, 해외가 각각 상이하게 쓰고 있는 현실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현재 남은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북은 '조국해방 50돐 민족통일대축전' 해외는 '8.15 조국해방 50주년 민족공동통일대축전'이라는 명칭을 각각 사용하고 있다.

5. 남, 북, 해외가 함께하는 공동행사로서는 개폐막식, 통일음악회와 사진 및 미술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와 단체별, 부문별 행사로 한다.

이와 함께 공동행사의 하나로 '통일대토론회' 또는 '대민족회의'를 가진다.

3자공동행사의 내용에 대한 규정을 담은 항이다.

3자공동행사로는 개폐막식과 함께 이미 남북예술인회담을 통해 합의한 바 있는 문화예술행사, 그리고 단체별, 부문별 행사가 있다.

여기서 단체별, 부문별 행사라 함은 남북종교인, 남북예술인 행사만이 아니라 사로청과 한청협, 한총련과 조선학생동맹 등의 남북해외의 유사단체간 부분별 공동행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또한 범민련의 자체 행사도 민족공동행사 안에 포함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그간 논란이 되어온 범민족대회와 관련하여 이 항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정확히 해석,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① 올해 범민련은 민족공동행사의 틀 안에서 민족공동행사 민족준비위의 보장과 협조 아래 단체별 행사의 하나로서 자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지난 시기 범민련은 범민족대회를 범민련의 총회로 규정한 자신들의 규약을 개정한 바 있다. 이것은

남측에서 범민족대회가 범민련의 독자행사라기 보다는 남측 통일운동세력 전체의 행사이며, 전국연합이 중심이 된 제반 통일운동세력이 공동으로 범민족대회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범민족대회를 추진해왔다는 남측의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민족공동행사의 틀 내에서 전개되는 범민련행사는 범민련의 자체행사이기 때문에 결코 '제6차 범민족대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민족공동행사와 별개로 범민련이 제6차 범민족대회를 추진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범민련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사안이나, 이 항과 아래 6항의 내용 속에는 남측준비위에 범민련 남측본부의 참가를 보장하는 조건에서 범민련이 통일운동을 중대하게 분열시킬 비이성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해 북측준비위와 해외준비위가 책임있게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북측준비위와 해외준비위는 앞으로 있을 범민련 공동의장단의 결정이 7.21공동합의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남측준비위에 명백히 밝힌 바 있다.

④ 범민족대회가 아닌 범민련의 자체행사를 민족공동행사의 틀안에서 전개하기로 한 이상 남측 범민련은 남북해외 준비위의 역사적인 합의를 존중하여 민족공동행사 준비위를 중심으로 폭넓게 단결하는 길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밝혀둘 것은, 당연한 귀결이지만, 남측 범민련이 추진하고 있는 '제6차 범민족대회 추진본부'가 민족공동행사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범민련의 자체행사 추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직이라는 점이다.

한편 공동행사의 하나로 '통일대토론회' 또는 '대민족회의'를 한다고 한 규정은 남측에서 추진하는 통일대토론회가 자칫 통일에 대한 타상공론이나 하자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토대 위에서, 정치적 행사로서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통일대토론회(남), 대민족회의(북)의 명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 검토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다.

#### 6.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에 범민련 남측본부를 참가시킨다.

이 항은 그간 남측 통일운동세력 내에서 핵심적인 논란사항이 되었던 민족공동행사와 범민족대회의 병행 추진 문제가 앞의 5항에서 사실상 해소됨으로써 통일운동의 단결을 더욱 강화할 필요에서 범민련 남측본부의 남측준비위에의 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또한 이 항에는 범민련 남측본부가 남측준비위에 참가함으로써 남측준비위의 조직적 지도와 규율에 따를 의무가 발생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아울러 이 항에서 참가의 주체로 명기된 것은 범민련 남측본부이지, 남측 범민련이 주축이 되어 있는 '제6차 범민족대회 추진본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의 5항의 해석에 근거하여 범추본은 민족공동행사의 틀 안에서 진행되는 범민련의 자체행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참가의 주체를 범민련 남측본부로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 8·15 민족공동행사 남측추진위원회

#### <부록 3> 토론회 지침서

## 통일대토론회 참가지침

### 1. 8.15 민족공동행사의 전체 상과 주요내용

#### 1) 8.15 민족공동행사의 전체 상

- 8.15 민족공동행사는 7천만 민족 전체가 모여 해방 50주년을 함께 경축 하는 대축제의 장입니다. 민족공동행사의 기본성격은 통일을 희원하고 해방 50주년을 경축하는 각계각층의 범민족적인 축제의 한 마당입니다. 범민족적인 축제의 한마당인 만큼 남북 당국을 포함하여 남북해외의 동포가 함께 하는 거족적인 대회가 되어야 하며 정견, 사상, 제도 등의 차이를 넘어 민의 최대단결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 8.15 민족공동행사는 각계각층의 자주교류운동과 다양한 통일의 의지와 힘을 모두 하나로 모아내는 민족 단결의 한마당입니다.

민족공동행사는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자주교류와 통일운동을 존중하고 아울러 이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튼튼한 민족단결의 토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각계각층 민의 실질적인 대표성을 갖는 민간 주체를 굳게 세워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민의 역할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 8.15 민족공동행사는 또한 분단을 극복하려는 민의 의지를 모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당면과제를 민족적 차원에서 공론화하는 장입니다.

95년은 우리 민족이 해방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며 또한 분단 50년이라는 비원의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민족공동행사는 해방 50년을 경축하는 민족적 축제의 장일 뿐만 아니라 민족이 통일로 나아가는데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당면한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그 해결방안을 거족적으로 모색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실현, 남북합의서의 실질적 실천, 민족구성원 다수가 동의하는 통일 방도의 모색 등을 통해 평화와 통일의 실질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8.15 민족공동행사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 2). 8.15 민족공동행사의 주요 내용

- 판문점에서의 민족공동경축대회
- 남북이 각각 백두와 한라에서 시작하여 통일의 염원을 방방곡곡에 확산할 통일맞이 삼천리대행진

- 남북의 문화예술역량을 모아 민족문화의 큰 힘을 보여줄 남북문화제
- 통일에 대한 민족의 염원을 노래로 경연하는 한겨레통일노래자랑
-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당면과제를 공론화하는 통일대토론회
- 통일의지를 모으는 각계각층의 부문별 행사(노동, 청년, 학생, 여성 등)
- 각 위원회의 과제별 행사(일본문제, 국가보안법대책 등)

## 2. 통일대토론회의 성격과 8.15 민족공동행사에서 통일대토론회가 차지하는 지위

### 1) 통일대토론회의 성격

(1) 통일대토론회는 평화실현과 통일방도 등을 모색하는 정치적 행사이입니다

무릇 민의 통일행사 가운데 가장 비중있게 접근되어야 할 장(場)은 민의 통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운동의 과제를 결의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이러한 자리는 당연히 정치적 성격을 떨 수밖에 없으며 이로 말미암아 정부와 긴장과 대립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난 시기 범민족회의는 바로 이러한 취지를 구현하는 장이었습니다.

해방 50년을 맞이하는 올해 새로운 형태의 '민족공동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지난 날의 정치적 행사를 바로 이번 '통일대토론회'로 치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왜 직접적인 000회의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토론회라는 형식으로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누누히 밝혔듯이 '평화와 통일의 당면과제에 대한 접근을 보다 대중적으로 전개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1부 토론회를 마친 후 제2부에서 회의형식을 벌어 당면 현안으로 되고 있는 통일운동의 과제를 확정짓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결의를 모아낼 것입니다. 평화협정 체결, 남북합의서 이행, 통일을 가로막는 제반 법적 제도적 장치의 폐기, 전민족적 통일방안 등에 관해 입장을 정리할 것입니다. 즉 이번 통일대토론회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토론회라는 그릇에 정치적 내용을 담은 자리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2) 통일대토론회는 각계의 통일논의를 수렴하는 통일광장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지를 모아내는 과정을 선행해야 합니다. 이미 토론회 기획안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토론회에는 각 지역과 부문의 대표자 발언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과 부문에서 바라보고 있는 정세와 통일운동의 현실 그리고 앞으로의 각오 등은 우리에게 통일운동의 저변 확대와 자기 발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언시간은 정부의 통일논의 독점을 거부하고 민(民)의 통일 논의 자리, 민의 통일 광장으로 될 것입니다.

(3) 통일대토론회는 남북해외가 함께하는 민족공동행사입니다

이번 통일대토론회는 남측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7월 21일 남과 북 해외는 8.15 5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민족공동행사의 일환으로서 남측에서는 '통일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7.21 합의문 제 5조) 이러한 취지에 맞게 8.15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에서는 조만간 북측 대표단 참여를 위한 당국과의 접촉에 나설 것이며, 통일토론회 당일 채택되는 '남북해외동포에게 드리는 글'(글의 명칭은 아직 최종결정된 것은 아님)을 남북해외가 공동합의하여 발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2) 8.15 민족공동행사에서 통일대토론회가 차지하는 지위

위와 같이 이번 통일대토론회가 토론회라는 형식을 갖추기는 했지만 민의 의견에 기초하여 남북해외가 함께 하는 정치적 행사라고 할 때, 이번 8.15 행사에서 토론회가 차지하는 지위는 실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즉 이번 토론회는 전체 8.15 민족공동행사의 내용적 집중점이자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 8.15 행사는 대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문화제, 대행진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는 통일운동의 대중적 지반 확대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지반의 확대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대되고 넓혀진 운동영역은 다시 하나의 지점으로 집중되어 운동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는 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확산과 집중의 통일적 결합을 통해 통일운동은 더욱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바로 대중적 지반 확대에 근거하여 운동의 집중점, 운동의 방향성을 정립해내는 자리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각 지역과 부문에서는 이번 토론회가 갖는 이와 같은 중요성을 평가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조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자신의 지위에 맞는 형태로 조직되고 민의 적극적인 참가로 열기가 넘치게 된다면 올해 통일운동의 성과도 그만큼 확대될 것이며,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그만큼 후퇴할 것입니다. 8.15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님들과 참가성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중 앙 행 사 일 정 표

날짜 시간	12(토)	13(일)	14(월)	15(화)	
9-10					
10-11					
11-12					
12-1					
1-2					
2-3					
3-4					
4-5					
5-6					
6-7					
7-8					
8-9	민족공동행사 개막식 (명동성당)  “김선명과 양심수석방을 위한 시민결의대회”	8.15 50주년 기념 남북통일 음악회 (보라매공원)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전야제 및 삼천리 대행진단 입성환영식 (보라매공원)	민족통일 대토론회 (대회장 주변)	판문점파견 대표단환송식  8.15 50주년 민족공동경축대회  남측폐막식
9-10					
10-11					
11-12					
12-1					
1-2					

##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참가단체

### 연합단체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민족의학해약통일을위한종교인협의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 개별단체-가나다순

가톨릭노동사회전국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협의회/ 경례사랑실천운동연합/ 경기남부지역민주노총주진위원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아그룹노동조합총연합준비위원회/ 기장여교역자협의회/ 나라사랑양심선언자모임/ 단군단/ 대구지역민주노총조합총연합주진위원회/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 대중교청년회/ 동학민족통일회/ 맥이민족회/ 민족건축가협의회/ 민족굿위원회/ 민족문학작가회의/ 민족미술협의회/ 민족사진가협의회/ 민족영화위원회/ 민족음악협의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증위원회/ 민족회의부산시본부/ 민족회의서울시본부준비위원회/ 민족회의울산시지부/ 민족회의원주시지부/ 민주노총경기동부지역주진위원회/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준비위원회/ 민주노총대전충남지역주진위원회/ 민주노총마산창원지역준비위원회/ 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주진위원회/ 민주노총전북지역주진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남부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북부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경남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서울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부천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북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제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충북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정치연합/ 부산양산지역노동조합총연합/ 부천시흥지역민주노총준비위원회/ 서적출판노동조합대표자회의/ 신시민운동연합/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우리노동문제연구원/ 우리민족아나운드/ 우리찾기모임/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지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협노동조합/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 전국도시빈민협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족극운동협의회/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사무노동조합연맹/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지동차노동조합연합준비위원회/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전국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진보정당주진위원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전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주정의구현전국연합/ 태평양전쟁학생자유가족협의회/ 통일경모회/ 통일맞이대전충남겨레모임/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기독교사회운동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운동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프로듀서연합회/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